

第262回國會
(定期會)

教育委員會會議錄

第 10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6年11月20日(月)

場 所 教育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 1. 2007년도 예산안
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 3. 2006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審査된案件

- 1. 2007년도 예산안 1
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 3. 2006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10시42분 개의)

○委員長 權哲賢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예산 관련한 내용의 사전 조정 때문에 다소 시간이 늦어진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7년도 예산안

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3. 2006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委員長 權哲賢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

정 제3항 2006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교육 예산안을 살펴보면, 금년도 예산액보다 7.2%가 증액된 약 31조 2100여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볼 때 정부 전체 예산의 19.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만 놓고 볼 때 정부 전체 예산에서 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교육 여건이나 교육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인적자원 강국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는 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는 획기적으로 증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교육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편성하여 제출한 막대한 교육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고등교육 부문, 초·중등 교육 부문, 그리고 평생

교육 부문 등 각 분야별 사업 예산의 편성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없었는지,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 편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철저히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신일 교육부총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예, 말씀하십시오.

○최순영 위원 오늘 중요한 예산심의의 전체회의가 있는데 10시에 회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30분간 늦었는데 그 30분간 늦게 진행되는 것도 사실 비교집단체인 저한테도 사유를 얘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유감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요한 예산심의를 다루기에 앞서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교육 상임위 구성된 지가 벌써 6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소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않고 예산심의를 다루는 것은 제가 지난번 2004년도에 했던 사례를 보았을 때 예산이 제대로 심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놓고 하나하나를 다 심의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나누어서 했을 때 사실 여러 경험을 놓고 보았을 때 위원들이 지역구 챙기기나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교육 상임위 위원들이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신뢰도 떨어질 것이고 예산심의하는 데에서 많은 질타도 받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 소위원회 구성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예산심의도 제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우선 소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가 이때까지 구성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에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 당연히 의석 수에 따라서 그 비례로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계속 지금까지 미루고, 제가 여러 가지로 의견을 듣기에는 한나라당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한나라당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상임위 다 끝날 때까지 안 할 것입니까? 17대 끝날 때까지 소위원회 구성 안 할 겁니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보궐 선거 끝나고 나서 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당선되면 교육위 들어오게 해서 소위원회 구성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보궐 선거 끝났으면 한나라당 교육 상임위 누가 들어올 건지 빨리 결정을 하든가 해야지 중요한 예산심의를 놓고 이때까지 소위원회 구성도 안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소위원회부터 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權哲賢 말씀 고맙습니다.

10시 시작을 30분 정도 늦추면서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통보하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결 소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왜인지는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보궐 선거가 끝나면 상임위원회 위원 재배정을 하고 그때 다시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재·보궐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인천에서 당선되신 이원복 의원이 교육위원회로 들어오는 문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의 결정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배정 조정을 하지 않으면 못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교육위원회에 오겠다고, 한나라당에서도 수락을 하고 원내대표들 간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난 15일 국회가 파행에 들어가면서 운영위원회를 열지 못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오늘 이 시간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늦출 수가 없어서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하루빨리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재배정해 주고, 재배정해 준 수에 따라서 우리 소위 구성을 하자고 한 것이 양당 간사와 위원장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예산심의는 심의대로 하면서,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못하고 배정이 안 될 때는 우리가 2004년도에 사용했던 방법대로 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은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또 관례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점은 예산심의를 해 가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존경하는 권철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2회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2007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7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1.2%인 약 4조 9억 원이 감소한 3856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감소의 주요 사유는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세입으로 편성해 오던 교육세 세입 3조 6957억 원을 재정경제부 소관으로 부처 변경 편성함에 따른 감소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2% 증가된 31조 21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투입된 재정에 대하여 성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예산체제로 개편하였으며 정부조직법 및 우리 부의 주요 정책기능을 감안하여 고등교육 부문, 평생·직업교육 부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교육일반 부문 등 4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하위 25개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세출예산안의 부문별 주요 편성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등교육 부문은 전년 대비 3.8%가 증액된 3조 40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학의 과학기술 분야 핵심 인재 양성과 인문사회 분야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제2단계 BK21사업에 2900억 원,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구조 개혁에 600억 원,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혁신 역량 강화에 2594억 원, 교수의 학술연구 진흥을 위한 기초 및 인문사회 학술연구조성사업에 31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더불어 능력과 의욕이 있는 대학생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생 국가보증 학자금 사업에 2189억 원과 국립대 인건비·운영비 1조 9774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전년 대비 0.4%가 증액된 30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기술의 산업체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에 500억 원, 산업·고용구조 변화에 대응한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에 1680억 원, 국가 인적자원개발정책추진 활성화에 21억 원, 국제교육 협력 및 재외동포교육에 37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전년 대비 7.7% 증액된 27조 25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 기반 확충을 위하여 만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등에 2142억 원, 장애 유아 무상교육 지원에 327억 원,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에 372억 원,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있는 공교육 확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에 26조 37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더불어 학생에 대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밖 사교육 욕구를 흡수하여 소득 간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과후학교 지원에 1017억 원, 학교시설의 보건위생 환경 개선을 위한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239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교육 일반부문은 전년 대비 3.9% 증액된 243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일반부문은 고등교육, 평생·직업, 유아 및 초·중등부문을 공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부문으로 교육혁신위원회 운영비 14억 원, 교육부 및 직속기관 인건비·운영비 1578억 원, 교육차관 원리금 상환 71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 우리 부 소관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 소관 공공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등 3개 기금으로 내년도 운용 규모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7조 1097억 원, 사학진흥기금은 1884억 원,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4302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학연금기금의 주요 지출항목인 기금관리비가 당초 계상된 309억 6100만 원보다 66.6% 증가한 515억 7800만 원으로 행정부 자체 변경 기준인 30%를 초과함에 따라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제2항의 개정으로 사학연금기금에서 운용하는 채권 등의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면제대상 소득에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 변경됨에 따라 선급법인세 206억 1700만 원을 기금관리비에 신규로 계상하고 소요재원은 여유자금운용에서 조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7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책홍보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경재 정책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자료가 위원들한테 배부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장 박경재** 정책홍보관리실장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육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안, 2007년 예산안 개요, 기금운용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1쪽 국가재정운용계획안입니다.

그동안 교육예산은 2001년도 21조 6000억 원에서 2006년도에는 29조 1300억 원으로 연평균 6.19%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고등교육이 상대적으로 높게 증가한 데 비하여 평생·직업교육 부문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교육비 투자비중은 OECD 국가 평균보다 1.6%P가 높은 7.5%이나 정부부담은 OECD 평균보다 0.6%P가 낮은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재정투자에 대한 주요성과로는 OECD 주관 PISA 평가에서 문해 해결력 1위, 읽기 2위 등으로 높은 성취도를 나타낸 것과 고등교육 연구력 지표인 SCI 게재 논문 수에서 2005년도에 세계 12위로 향상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3페이지 교육정책 추진방향은, 첫째 지역 간·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안전망 구축을 통한 사회 통합, 둘째 학교에서 일터, 일터에서 학

교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일과 학습과 삶이 연계되는 평생학습체제 구축, 산업수요와 연계된 대학 육성 등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 넷째 학교교육의 내실화로 공교육의 신뢰 회복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서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중기 재정투자는 연평균 7.9% 수준으로 증가시켜 갈 계획이며, 부문별로는 고등교육에 4.6%,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에 5.2%,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연평균 8.5% 수준으로 증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2007년도 교육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첫째, 교육격차 해소 및 저출산·고령화 사회대비를 위한 교육복지 투자에 5873억 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고등교육 부문 연구력 지원을 위하여 우수인력 양성과 산학협력 지원에 1조 20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일과 학습이 연계되는 평생·직업교육과 국가간 교육교류 증진을 위한 국제교육 협력에 547억 원을 편성하였고, 10페이지 학교교육의 내실화로 공교육 기반을 강화하는 데 3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정부예산 및 교육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특별회계를 포함한 2007년도 정부예산 규모는 2006년도 204조 2000억 원 대비 1조 9000억 원이 감소한 202조 3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2007년도 우리 부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4조 9억 원이 감소한 3856억 원이며 감액 사유는 교육세를 재정경제부 소관으로 이관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13페이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7.2% 증가한 31조 2159억 원이며, 기금사업비는 전년보다 16.1% 증가된 3조 1278억 원, BTL 규모는 전년보다 21.2% 감소한 2조 4801억 원으로 2007년도 교육부 소관 전체 재정 규모는 전년도 34조 9702억 원에서 5.3%가 증가된 36조 8240억 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다음은 부문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은 전년 대비 3.8%가 증가한 3조

4075억 원이며 타 부분에 비해서 증가율이 낮은 것은 재정융자특별회계에 편성된 사학진흥기금 300억 원이 공적자금관리기금으로 이관됨에 따른 것입니다.

평생·직업·국제 교육 부문은 전년 대비 0.4% 증가된 3074억 원,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교육복지 확충 등에 따라 7.7%가 증액된 27조 2571억 원, 교육일반 부문은 2438억 원 수준입니다.

15페이지 부문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교육 부문은 총 3조 4075억 원으로 6개의 단위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대학 교육역량 강화 분야는 전년 대비 241억 원이 증액된 52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단계 BK21, 누리사업,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 정착, 국립대병원 지원 등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서울대 농·목장 평창산업 첨단연구단지 조성을 위해서 부지매입비 35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설치에 각 9억 원과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둘째, 대학의 특성화·다양화 분야로서 누리, 수도권대학 특성화, 고부가가치 산업인력 양성 등에 32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학술연구 역량 강화 분야는 전년 대비 221억 증액된 34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술연구 진흥 및 확대를 위하여 기초과학 및 인문사회 학술연구 조성비를 전년보다 각각 100억 원씩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술진흥재단 및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 고전 국역사업 등은 전년 수준 또는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 복지지원 확대를 위해서 219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섯째 대학 지식정보화 지원은 전년 대비 14억 원 감액된 196억 원 규모로 대학 도서관 및 대학 정보화 지원은 일부 대학 부담 확대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감액하고, 사이버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여섯째, 국립대학 운영지원은 전년 대비 409억 원이 증액된 1조 9774억 원으로 국립대 교수 등 인건비가 전년 대비 692억 원 증액된 데 비하여

하드웨어 지원 및 시설 확충과 실험실습기자재 확충비 등은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 및 국제교육 부문은 3074억 원으로 5개의 프로그램 단위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평생학습 및 직업교육체제 분야는 618억 원으로 평생교육인프라 및 평생교육센터 운영,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 등은 전년 수준으로 반영하고 여성교육개발 진흥은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대학 지원 등을 위하여 전년보다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둘째, 인적자원정책기반 강화 분야는 전년 대비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 정책추진 활성화 및 전문대 특성화는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고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을 위하여 신규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국제교육협력 및 재외동포교육 분야는 전년보다 6억 원이 감액된 37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지원 종료, 국제기구 인적 교류 사업을 인사위원회로 이관함에 따른 감액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인 국제교육진흥원의 국제교육진흥사업은 20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27조 2571억 원으로 6개 프로그램 단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내국세 19.4%와 교육세 전입액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조 7764억 원이 증액된 26조 37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확충 분야는 전년 대비 1536억 원이 증액된 413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만 5세아 무상교육 등 유아교육, 장애유아 교육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하고 신규 사업으로 초·중등학교 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239억 원, 방과후학교 지원에 101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셋째, 학교교육 내실화는 전년 대비 129억 원이 증액된 52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5일제 수업 실시에 따른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도서개발비, 역사 왜곡 대응을 위한 동북아역사재단 운영비 등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거점 초등학교 영어훈련센터 시설비를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넷째, e-러닝의 활성화에 339억 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연구 및 사료 수집·편찬에 50억 원, 사학연금 부담금 및 대여자장학금으로 37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전년 대비 93억 원이 증액된 243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BTL사업은 전년 대비 6684억 원이 감소된 2조 4802억 원으로 초·중등학교 시설투자가 감소되고, 서울대 기숙사 신청에 따라 28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울산국립대 신설비 2273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3페이지 양극화 해소 및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예산은 중복 부분을 제외하면 1조 5352억 원이 됩니다. 양극화 해소에 1조 4783억 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68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드린 예산의 자세한 내용은 29페이지~78페이지까지의 부문별 사업 개요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재원조달 규모는 자체수입 2조 7535억 원, 정부 내부수입 5021억 원, 여유자금 회수 3조 8541억 원 등 총 7조 10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가 늘어난 수준입니다.

동 기금으로 연금급여, 후생복지 등 사업비에 2조 7909억 원, 기금운영비에 534억 원, 여유자금 운용에 4조 2654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80페이지 이하 기금사업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사학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재원 조달 규모는 자체수입이 1452억 원, 정부 내부수입이 300억 원, 기타 여유자금 회수 132억 원 등 1884억 원입니다.

동 기금으로 시설자금 용자 등 사업비에 1100억 원, 기금운영에 29억 원, 재특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 정부 내부지출에 665억 원, 여유자금 운

용에 90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83페이지 이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으로서 재원조달 규모는 자체수입 483억 원, 정부 내부수입 2189억 원, 기타 여유자금 회수 1629억 원 등 43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가 증가된 수준입니다.

동 기금으로 이차 보전 등 사업비에 1617억 원, 기금운영비에 90억 원, 여유자금 운용에 2595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7년도 교육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육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노재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예산과 일반회계 그리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교육 부문 예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 규모가 처음으로 30조를 넘어섰다는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 부문의 재정투자가 21조 원 규모였던 2001년도와 비교하여 약 10조 원이 증가한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OECD 교육지표에서 나타난 국가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에서 학부모 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이 OECD 평균보다 2.2%p 높은 2.9% 수준으로 이는 학부모 부담이 1% 이하인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고, 특히 이러한 공교육비 외에 학부모들의 연간 사교육비 지출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2007년도 교육 부문 예산편성의 특징은 교육 부문 복지에 대한 투자가 매우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대학생 학자금 대출, 장애아 교육 지원 등 교육 안전망 구축을 통한 교육복지 확충을 위한 투자가 지난해보다 2293억 원 증가한 5873억 원의 규모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부문별 예산 배분 및 특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초·중등 교육 부문에 전체 예산의 87%에 해당하는 27조 2571억 원이 투입되고, 고등교육 부문에 11%인 3조 4075억 원, 평생·직업·국제 교육 부문에 1%인 3074억 원이 투입되며, 나머지 교육행정 부문에 약 1%인 2439억 원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17쪽 하단 세입예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조 9억 원이 감소한 3859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조 9349억 원이 감소된 3645억 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69억 원이 감소된 209억 원입니다.

이와 같이 세입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된 이유는 교육세의 재정경제부로 이관에 따른 것이며, 국유재산특별회계가 폐지된 데 기인한 것입니다.

19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교육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고등교육 부문 지원예산은 전년 대비 1632억 원이 증가한 3조 1471억 원으로 편성되어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신규사업으로 대학 재정정보 분석 및 시스템 운영에 3억 5000만 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설치사업에 75억 4800만 원이 반영되고, 종료된 사업은 국립학교 신축건물 비품비 53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고등교육 부문의 주요사업별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은 국립대학 통폐합 지원사업과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 등 2개의 세부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2007년도 예산안에 6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05년도 예산의 배분이 늦어짐에 따라 2006년 9월 말 현재 각 대학의 집행률이 64.1%에 불과하고, 2006년도 예산 700억 원도 150억 원만 교부되는 등 집행 실적이 극히 부진

합니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예산지원 전액을 박사과정 재학생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등 특성화와는 거리가 먼 집행이 발견되었으므로,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 예산은 삭감하고, 국립대학 통폐합 지원예산도 현재까지의 보조금 집행 실적과 구조개혁의 집행 정도 및 회계기간 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정착지원사업은 법학전문대학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7년도 예산안에 9억 원 규모로 신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가결을 전제로 편성된 예산이므로 근거 법률이 없는 예산이 되어 집행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에 대한 법안 심의가 끝난 이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2쪽, 2단계 연구중심대학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999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7년간 추진되었던 1단계 BK21사업에 이어 실시되는 2단계 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연 2900억 원씩 총 2조 300억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의 사업단 선정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보다 실제 선정된 사업단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 194개 사업단과 290개의 사업팀을 선정·지원하는 계획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244개 사업단과 325개 사업팀을 선정하여 26%와 12%씩 지원 대상 사업팀 또는 사업단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1단계 사업을 통하여 지원된 사업단 수가 참여사업단까지 합하여 110개 사업단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단계 사업의 무리한 사업단 확대는 동 사업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바, 향후 평가에 의한 지원 중단 등으로 발생하는 여유 재원은 새로운 사업단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보다 기존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활용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업 중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총 10억 원의 예산으로 BK21사업에 참여하는 사업단의 학생들에게 세계적인 외국 기업의 인턴

십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2006년도 현재 동 사업의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당초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우수 기업과 협약 체결을 통하여 연 100여 명에게 인턴십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계획이었으나, 11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사 한 곳에서 9명이 인턴십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계속 추진에 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의학전문대학원 설치 사업은 총 75억 4800만 원의 예산이 신규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검토할 사항은 한의학전문대학원 설치에 따라 수반되는 국립대학병원의 설치 예산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국립대학병원설치법상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으로 되어 있고 아직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이관에 관한 법안이 심사 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현행 법률을 무시한 채 부처 간 합의에 따라 예산의 소관을 변경한 것은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수도권대학 특성화 지원사업은 2007년도에 6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문사회 및 기초과학 학술연구 조성사업은 인문사회 분야 및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자에 대한 연구비 지원, 회귀 학문 보호, 신진 연구자 육성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 전년 대비 6.9%가 증가한 311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인문학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동 사업은 인문사회 분야와 기초과학 분야의 지원 비율이 1대 1.4 수준이고, 2단계 BK21사업은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지원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의 18%에 불과하며,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전체 대학이 수주한 연구비 중 인문학 분야에 지원된 연구비가 5%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인문학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연구인력 중 인문학 분야 연구자가 대학원생의 12%, 박사급 연구자의 25%, 대학교수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문학 분야 박사급 연구자의 수혜 비율이 박사급 연구자 전체의 18%에 불과하다는 것은 학문 분야 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술진흥재단출연사업은 학술진흥재단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007년도에 86억 1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증액된 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학술연구지표 개발, 학술연구지원정책 및 연구지원제도 개선, 학술지원사업 홍보 등에 총 16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집행 계획에 나타난 세부 내역을 살펴봤을 때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위탁받아 시행하는 학술연구조성사업의 관리·운영비인 심사평가운영비 집행 내역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는 재단의 기본사업비와 수탁사업 관리·운영비 사이에 혼재되어 있는 기관 운영비를 그 성격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재단 운영에 필수적인 것으로 소요되는 경비만을 우선적으로 기관 고유사업비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8쪽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유·초·중등교육 부문 사업은 전년 대비 1조 9547억 원이 증가한 27조 2571억 원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88.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은, 신규사업 4개 분야에 방과후학교 운영 885억 원, 영어교육활성화 추진 7억 원, 학생 건강증진 및 급식환경 개선, 깨끗한 학교 만들기 238억 8700만 원 등 총 4개 사업 분야에 총 1266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아교육 지원사업 200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하여 145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142억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만 5세아 무상교육 지원 인원을 14만 2000명에서 15만 2000명으로 확대하였고, 지원 단가 또한 사립유치원의 경우 월 15만 7000원에서 16만 2000원으로 증액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취원시키고 있는 학부모의 부담 비용을 격차를 완화하고 육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규로 계상된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2006년 9월부터 3개 지역에 대하여 시범 실시하였으나 시범사업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07년도에 3개 지역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 3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아 교육 지원사업은 2007년도에 특수교육 보조원 확충,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 종일반 운영, 3급 이상 장애 대학생에 대한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전년 대비 193억 9700만 원이 증가한 326억 6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장애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의 경우 대상은 만 3세~만 5세 장애 유아 외에 만 6세 초등학교 취학 의무 유예자가 유아 특수기관 및 일반 유치원 취학 희망 시 1년에 한해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의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은 취학 전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에게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자의 증가로 지방비의 부담률을 하향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부담액이 8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31쪽 되겠습니다.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은 학교시설의 보건위생환경 개선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강 증진 및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07년도에 238억 8700만 원, 또한 동액의 지방비 237억 900만 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학생의 건강과 보건을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으나, 소요예산을 각 시·도교육청에서 재정 부담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사업은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저소득층 바우처(voucher) 지원사업, 도시 초등보육 지원사업 등에 1017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 중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사업은 일반 회계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개의 계정에 분리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계정을 통합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6년도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시범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대응투자가 86.2% 수준이나, 2007년도와 같이 사업 대상이 전체 시·군(86개 시·군과 제주특별자치도 2개)으로 확대되는 경우 동 사업에 참여 의욕이 낮거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

으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 부여 등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33쪽, 교육대학 육성사업입니다.

교사 양성 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2003년도부터 시행되어 온 이 사업은 2007년도에는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대학 정보화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전년보다 23억 원이 감소한 93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사교육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2005년도부터 우선 6개 교육대학에 집중 투자하여 교육센터를 건립하고 나머지 대학에 대해서는 차후에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교사교육센터 건립사업의 경우에는 교육대학의 시설확충 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교육대학 시설확충 사업에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읍·면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거점 초등학교에 영어훈련센터 두 곳을 구축하기 위하여 시설비 7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나, 의욕적으로 영어마을 등을 설립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구축하도록 하고, 국가는 이들 센터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방식으로 예산지원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한일역사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하여서는 2007년도 예산은 9억 8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관련 예산이 일부 불용되었고, 2006년도 11월 현재 일본 측 위원이 아직 선임되지 않아 2006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예산 9억 4100만 원의 22%인 2억 500만 원이 집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운영사업은 동북아재단에 대한 출연금으로 200억 76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편 2007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사업으로 '외국 교과서 왜곡 대책 및 한국 바로알리기' 사업에 10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동북아역사재단 운영 사업 중 '여론 심층분석 및 국제 지지여론 조성 역사교과서 왜곡 대응' 사업에 25억 9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이 양 사업에 대한 통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7쪽입니다.

평생·직업·국제 교육 부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문 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9300만 원이 증가한 3074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13억 9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 촉진 사업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설치된 진로정보센터 운영, 진로정보 관련 자료수집 및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인바, 2007년도에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감소한 2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 중 6억 원이 반영된 커리어넷 운영비는 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워크넷 및 한국직업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 및 상담 기능과 매우 유사하므로 이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통폐합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39쪽입니다.

전문대학 WORK-STUDY 프로그램은 가정 형편이 곤란한 전문대학생에 대하여 근로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에 대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7년 예산에 1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원 배분에 있어 60억 원의 차등을 두고 있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계곤란자 비율의 격차가 60억 원의 차이를 들만큼 크지 않고, 수도권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율 및 취업률이 비수도권 학생들보다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재원 배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1쪽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입니다.

2006년도 예산 대비 50억 2600만 원이 증액된 504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농어촌 우수고 육성 및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에 예산을 대폭 확대하거나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과 공립병설유치원 신·증설, 학교도서관 및 장서 확충, 교직원 사택 현대화 및 확충 사업은 중단되었습니

다.

다만 공립병설유치원 신·증설 사업과 학교도서관 및 장서 확충사업, 교직원 사택 현대화 및 확충 사업의 폐지에 관해서는 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함께 정책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일선 기관의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일관성 있는 사업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촌 우수고교 육성사업은 농어촌에 1군 1우수고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 30개 학교를 대상으로 24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1410억 원을 지원하여 전국 88개 군에 1개 교씩 모두 88개 고등학교를 선정·지원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집중 육성을 위하여 2007년까지 조기집행하도록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30개 교 중 9개 학교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30개 교만을 동 특별회계에 지원하고 있어 14개 학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식보다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필요한 수준의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으로 2007년도 예산안에 2594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NURI사업의 전체 사업기간은 2008년도까지 설정되어 있고,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경우 사업단을 추가로 선정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인센티브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사업단에 참여한 교수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44쪽 하단입니다.

지방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은 2006년도 사업과 동일하게 1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3년씩 3단계로 총 9년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으나 사업 추진이 계획과는 달리 변형되어 있다는 점, 타 사업과의 중복성 문제 등을 감안할 때 2007년도 이후 동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

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은 2007년도에 168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은 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가 저조하여 예산이 삭감된 5개 대학 중 4개 대학이 같은 영역에서 다음 연도 사업단으로 재선정되거나 집행 실적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국고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된 대학이 다음 연도 사업단으로 선정되는 등 집행 실적에 대한 평가 관리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6쪽 상단입니다.

2001년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국제교육진흥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된 회계로서 2007년도 세입예산은 209억 1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94억 6300만 원, 자체 수입 10억 28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4억 2300만 원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209억 1600만 원입니다.

이 중 국비유학 사업은 국가 발전 전략상 필요한 학문 분야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비인기·소외 학문 분야의 연구 지원으로 학문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21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 유학생의 선발 과정상 문제점을 보면, 수산학, 해양학 등 특정 분야는 지원자의 미달, 성적 미달 등으로 모집 인원이 미달되고 있고, 미선발 인원에 대해서는 타 분야에서 대체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달 원인은 이들 분야가 소외·비인기 분야인 점도 있으나 국비 유학 장학금의 지급액이 부족한 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동 장학금을 연차적으로 증액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하여 국가 전략 분야의 전문가 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교육부 소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정 손익 현황을 말씀드리면, 동 기금의 2007년도 추정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교직원 등으로부터 받은 부담금 수입과 여유 자금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 등 사업 수익은 1조 9473억 원이며, 이에 따른 연금 급여 등 사업비용 1조 1983억 원, 사업관리비 343억 원을 감하면 총 714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색그린야드호텔의 처리 문제입니다.

06년도 7월 집중호우 및 산사태 악화로 약 117억 원의 피해를 입은 바 있으며, 이의 복구를 위하여 2006년도에 1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호텔에 대해서는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복구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호텔을 매각할지 리모델링할지에 관한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호텔 직영은 1993년부터 계속 2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호텔 처리 방향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사학진흥기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금으로 핵심 사업은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자금을 무담보·장기·저리로 융자하는 것입니다.

22쪽 상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융자 실적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신청 학교 수 대비 배정비율이 94.8%, 신청액 대비 배정비율은 46.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청한 학교가 대부분 지원을 받는 대신 융자액은 절반만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도 국정감사 시 동 기금을 통하여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받은 대학 중 학교회계 적립금이 수백억 원에서 1000억 원 이상인 학교들이 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사학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된 동 기금의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지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용자 배정 시 건축, 기타 적립금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학교에 대해서 용자 배정을 차등 감액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불이익이 용자 지원 대상의 선정 과정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정 후 지원액 결정 시 적용된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립금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학교에 대해서는 선정 후 감액하는 방식이 아닌 선정 시 감점을 적용하는 실질적인 제한을 두는 방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동 기금의 2007년도 수입 및 지출 규모는 4301억 6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운용 규모인 2987억 5100만 원보다 크게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는 동 기금 출범 후 신용보증을 위한 기본 재산을 납입해 온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출연금 납입이 2006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정부의 기본 재산 출연금이 증가하였고 또한 여유 자금 회수액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37쪽,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동 기금운영계획안에 따르면 대학생 학자금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은 약 50만 명에게 총 1조 4850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도 말 총 보증잔액이 3조 237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동 기금의 운용배수는 15.8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 기금은 현재 소득이 없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을 공급하는 재원으로 동 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은 기본 재산의 배수로 표시되는 운용배수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바 운용배수가 커질수록 사고 발생에 대한 변제능력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동 기금의 법정 운용배수는 20배로서 동 기금과 법정 운용배수가 동일한 타 신용보증기금의 2005년도 말 현재 운용배수가 15배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시작 초기인 동 기금의 운용배수가 다소 높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음에는 2006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채권 등의 이자소득의 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대상에서 원천징수 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금관리비에 선급금 206억 1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여유 자금 운용에서 206억 17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변경안이 제안된 이유는 2005년도 2월 19일자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에서는 이 기금을 원천징수 대상에서 면제하였으나 2006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서 선급 법인세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기금운영계획이 확정된 이후 2005년 12월 30일자로 시행령이 재개정되어 원천징수 대상으로 함에 따라 선급 법인세의 확보가 필요해졌습니다.

향후 이와 관련하여 여유 자금 운용 항목에서 예산액을 감액 조정함에 따라 채권의 매입 규모가 줄어드는바 선급 법인세의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계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나중에 보충질의시간 5분씩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위원** 이은영입니다.

먼저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편성한 예산에 의하면 내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정착 지원 항목으로 얼마를 책정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9억 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 위원**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께서는 “법이 통과된 다음에 반영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실은 법이 연내에 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2007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이 통과되어도 예산 집행을 하기가 나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 위원 그래서 이것은 2007년도에 예정대로 집행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같은 생각이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은영 위원 그리고 제가 한나라당 위원과 민주노동당 위원께 아울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법률은 민생 법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 근래 각 대학교수님들이나 또는 보직자들을 만나 봐도 왜 법학대학원이 이렇게 늦어지는가, 여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한나라당 측에서 사학법 개정 때문에 연계되어서 늦어진다고 한다면 빨리 사학법 개정안에 착수하기를 촉구합니다.

저는 사학법 개정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회는 전혀 효율적으로 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님이나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지금 협의하시느라고 바쁜데요. 국정감사 때에도 사학법 재개정 필요하다고 하면서 막상 재개정 작업에는 조금도 착수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국민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지요.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법안 심의에 착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이나 교육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연내에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법학대학원에 관한 법률은 이게 예산 관련 법률이기도 합니다. 예산안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 문제를 매듭짓기를 촉구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감사합니다.

○이은영 위원 이번에 수능시험은 원만하게 진행되었나요? 혹시 수능 부정자들이 많았거나 거기에 대한 적발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휴대전화기하고 MP, 이런 것의 지입을 예년처럼 늘 금지하고 철저히 알리고 이렇게 했음에도 여전히 그런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예년보다 한 10여 명 더 많아서 좌우간 그것을 앞으로 더 철저히 감독

하기 위한 대책을 저희들이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위원 지금 교육부 측에서는 수능의 난이도나 변별력 부분에 있어 이번 수능 시험 출제가 성공적이었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위원 아주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뭐 만족이야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큰 무리 없이 난이도 수준이, 또 그 과목별 수준도 비교적 고르게 유지되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은영 위원 최근에 대학 입학과 관련해서 특기자 선정 및 경진대회 우수자에 대한 특별전형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습니다.

교육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에 착수하셨나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보도된 대로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위원 어디에서 수사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경찰에서 해서 그것을 이제 일부……

○이은영 위원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 제도 자체에 대한 감사나 재검토에는 착수하고 있지 않은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 자체는 교육청에서 하고, 또 교육부가 아니라 과학기술부, 여러 부처에서 그 사업을…… 교육부가 직접 하는 것은 없고요, 다른 부처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자체로 제도를 어떻게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다른 부처들과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개선하기 위해서.

○이은영 위원 경찰의 수사는 고발이 들어온 사건, 문제되고 있는 몇몇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이고요, 교육부로서는 마땅히 이러한 경진대회 우수자에 대한 입학 특별 배려 제도가 과연 바람직한가 또는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아야 될 겁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물론입니다.

○이은영 위원 다른 부처에서 보는 시각과 교육부에서 보는 시각은 별개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경진대회 우수자에 대한 특별 배려 제도에 대한 교육부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그리고 지금 각 대학의 특기자로 뽑은 사람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그 대학 내의 학습 및 대학 후의 취업 활동과 연계되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 학생들의 성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경진대회 우수자에 대한 입학 특별 우대 제도 및 특기자의 입학에 따른 학교 적응 및 또 추후의 취업 상황에 대해서 특별 조사를 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그것은 하신다고 지금 대답하신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 위원 다음으로는 인문학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예산에 인문학의 위기에 대비한 특별예산을 책정하셨습니까? 지금 인문학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이 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위원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반영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연구비 부족이 있고, 또 대학의 전체 학사 관리 구조 속에서 인문학 관련 학과들이 그 특성을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것, 인문학 계열 학생들의 사회적 취업률이 낮은 것, 이런 것을 주요 문제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위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인문사회 연구과제 선정률이 매우 낮습니다. 몇 %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정확한 것은 제가 외우고 있지 못하지만 자연·이공계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철현 위원장, 임해규 간사와 사회교대)

○이은영 위원 교육부총리께서는 인문학 부문의 연구를 장려할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물론입니다.

○이은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인문학 연구의 경우는 신청 대비 선정률이 13%~ 18%입니다. 이것

을 한 30%까지는 올려야 인문학 연구자들이 연구 의욕을 갖게 될 것이고, 인문학이 지금 고립되어 있는데 타 학문과의 연계 속에서 조금 더 응용부분을 넓히고 활용 범위를 확대하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인 것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인문학 발전을 위한 대대적인 계획을 구상하면서 타 부처나 청와대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위원 인문학연구원 설립도 몇 년 전서부터 죽 얘기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으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이번에는 다른 또 여러 가지 예산 소요 때문에 못 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충분히 이것을 여러 가지로 획기적인 구상을 해서 2008년도 예산에는 여러 가지로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여학생의 진로 탐색을 위한 직업능력 진로 교육과정 지원사업이 작년부터 시범 운영 중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 위원 여학생들의 경우는 특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지원 사업에서의 커트라인을 90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학교가 매우 축소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80점으로 내리면 16개교가 좀더 확대됩니다. 지금 90점으로 잡으니까 8개 학교만 선정되었거든요. 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조금 더 넓은 범위의 학교 내에서 지원사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 좀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그리고 제가 국정감사 기간 중 계속 각 시·도 교육청마다 다 질의한 것 중에 학생들의 성폭력이라든가 또는 자살 충동이라든가 등등에 관한 상담센터도 있고 합니담라는 그 밖에 학교와 관련된 진로상담 등등 종합적인 상담센터, 그리고 심리 전문가와의 연결이라든가 또는 다른 전문가와의 연결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함께 아울러서 연결해 줄 수 있는 원스톱센터를……

교육부만이 지금 학생이나 학부모를 위한 종합 서비스센터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기금도 많고 다른 부설 기관도 많지만 정작 교육 수요자를 위한 서비스기관은 없는 편이거든요. 이것을 위한, 당장 내년도에 설치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검토 사업비조차 지금 설정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 부분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할 여지는 없으신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산 속에는 반영을 못 했지만 이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합적인 상담지원센터를 특교사업을 통해 내년 공모를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런 센터를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발전시켜 갈는지 그것을 내년 중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위원 그런데 어느 부처에서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지금 그것 전혀 반영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빈말로 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 없지 않습니까? 교육행정 말아서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무원들 다 바쁘시고요, 예산도 없는데 그 사업이 어디에서 나오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년 우선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영 위원 왜 예산에 안 넣으셨습니까? 국감 때는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신다고 했으면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산이 거의 다 확정된 뒤에 제가 이 일을 맡아서 그 뒤에 그 구조 전체를 흐트리는 것이 아주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건 정규예산에는 못 했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 내년에는 특별교부금사업으로 하고 그것이 제대로 되면 그다음 해에 정규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지금 예산을 흐트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부에서 가져온 예산 변경 없이 그대로 하려면 뭐하러 예산심의 국회에서 받으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아닙니다, 적어도……

○이은영 위원 국회에서 예산심의 받는 것은 교육부에서 가져온 안을 가지고 좀더 재검토해서 확정안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 교육부에서 가져온 안은 다 확정되었으니까 더 건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예산심의 존재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 아니겠어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집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미 다 결정된 뒤에 제가 이 일을 맡아서 그것을 이것저것 다시 다 새로 검토하자 할 입장이 못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의 중요성은 충분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특별교부금사업을 통해서 내년에 시행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은영 위원 내년에 어떻게 시행되는가 주목해서 보고 가급적 이 사업이 조만간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해규 이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2007년도 예산, 기금운용계획 수립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 조금 전에 이은영 위원님께서 사학법 개정이 우리 한나라가 소극적이라서 추진이 안 되는 것만양 말씀을 하셨는데, 조속히 착수하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한나라당에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의 의지가 약하다든가 추진이 늦다든가 그게 아닙니다.

아침에도 제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 사학법 빨리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가 협의했잖아요,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야 원내대표께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은영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더 가지시고 확인을 하셔서, 조속히 착수하고 개정이 되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007년도 로스쿨체제 정착 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 예산안에도 9억 원이 편성되었었지요, 그렇

지요? 2006년에도 9억 원이 예산 편성이 되었어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것은 법안 가결을 전제로 편성된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삭감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국회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여부도 아직 불투명하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김영숙 위원 그래서 2007년도 본예산에 또 9억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저는 이것 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선 급한 것들이 수두룩한데 이것 언제 법 가결될지도 모르는데 돈까지 책정해 놓은 것 부당하다고 보아서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2006년도 예산 중에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안 가결을 전제로 해 가지고 반영된 평가준비위원회 예산 2억 4000만 원은 아직까지 집행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정에서 지금 두 가지가…… 그야말로 더 필요한 사업, 불가결한 그런 사업이 지금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절하게 예산 편성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김영숙 위원께서 염려하신 대로 로스쿨법이 통과 안 되어서 저희들도 그것을 걱정하고 있고 그러나 되도록이면 빨리 법을 통과시켜 주실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고, 그런데 이 논의가 꽤 일찍 시작되었기 때문에 벌써 많은 대학들이 이걸 고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로서는……

○김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요,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 심사도 되지 않았는데 1억을 책정해 놓고 이랬거든요. 그게 몇 개가 될지 알고 지금부터 어떻게 그렇게…… 물론 추정하는 것은 좋지요. 그런데 지금 법이 가결이 된다고 전제를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애깁니다. 그러니까 조속히 얼른 해결을 본 다음에 이 예산을 반영하든가……

또 한일역사공동위원회 운영사업 예산 집행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올해 2006년 10월 말 현재 예산이 9억 4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집행률이 22%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이것은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국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측 보면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 선임이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위원 선임이 안 되어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 선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위원회 구성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예산 9억 4100만 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을 늘렸어요. 이것 부적절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회 구성도 안 되어 있어요. 정말 참 이렇게 돈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돈이. 이렇게 배정될 수 있는 게……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는 일본 측에 위원회 구성을 독려해야 되겠지요, 빨리 추진이 되도록?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구성 후에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되도록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물론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본을 설득하고 압박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도 이 예산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대학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보면……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그러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김영숙 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이들을 기르는 그 교사, 교사가 여러 가지 여건, 교육 환경이 되어서 그야말로 질 높은 우수 교사가 양성되어야지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우수 학생이 양성된다고 보겠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003년도부터 시행되어 온 사업 중에 2007년도에는 교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과 교육정보화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또 전년보다도 23억 원이 감소해 가지고 93억 원, 100억도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전체의 그야말로 우수교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지금 이 문제도 보면,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학교에 보면 전산실에 서버가 구축되어 있는데 그것 가동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화사업이라든가, 교사들을 배출하기 전에 이것을 전부 다 터득하고 일선 학교에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서버 구축된 것이 다 가동이 되고 가정으로도 여러 가지 학교 내용을 알리고 다 이것 전산망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것이 다 풀어지도록, 돌아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돈을 어디다가 집행해 가지고 해야 되는가를 심층 분석을 해 가지고 제대로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여기에 교사교육센터가 있어요. 그 건립사업 경우에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서 2005년도에는 6개로 이것을 줄여 버렸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여기다가 6개만 우선 건립하겠다, 나머지는 대학에다가 차후에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동안에 추진하던 것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공사 중단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기 공사시설이 중단되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삭지요, 노후화되지요? 이것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교사교육센터 건립을 조속히 확보해야 된다고 합니다.

공사 중인 게 어떻게 중간에 중단되어 가지고, 돈도 책정을 이렇게 해 가지고 중단시키고 안 합

니까? 국가예산이 지금 조직도 안 된 것에는 계상을 해 놓고 지금 건립 중인 것은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이 모양이 되어 있고 이게 교육부가 할 일입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교육센터 건립사업 조속히 반영해서 예산 책정을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그것이 일부 완성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려고 했던……

○**김영숙 위원** ‘일부 안 되었습니다’ 하고 가볍게 보시는 것 같아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이것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교육대학들이 일시에 지어 달라고, 어느 대학이 늦어지는 것을 절대로 자기네들이 양보하지 못하겠다고……

○**김영숙 위원** 일시에 해야지요, 전국의 교사가 배출되는데 일시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아닙니다, 예산을 한 번에 세울 수가 없어서 부분적으로 하기로 했던 것을 동시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장관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동시에 해 달래서 어렵다는 얘기인데 지금 고등 교육 부문을 보겠습니다.

BK21사업에 2900억 원, 대학 경쟁력 강화, 대학 구조 개혁에 600억 원, 누리사업에 2594억 원, 학술연구사업에 3110억 원, 이 예산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누리사업, BK사업 그게 전부 다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교사를 배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건립센터 지금 도중에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동시에 지어 줘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만 교사가 잘 배출되면 되겠습니까, 전국이 다 고루 되어야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반영되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염려하신 대로 신속히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노력하고 있는 것보다도 바로 이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북아역사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설립 취지가 뭐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동아시아 이웃 국가와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제가 현실 외교적인 문제, 국토의 문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숙 위원** 역사적인 문제에 뭐가 있습니까, 역사적인 문제? 지금 제일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요? 동북공정 있지요, 지금 중국의 동북공정?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동북공정이 그것의 하나입니다.

○**김영숙 위원** 중국의 동북공정, 그다음에 일본의 독도영유권 문제가 있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 큰 것 때문에, 지금 이것 때문에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전략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서 동북아역사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정원 표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임원하고 기능직을 제외하고서 연구직이 많아져야 되겠지요, 여러 가지 행위를 하려면?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좌우간 필요한 부분만, 기 쓰여진 예산에 보면……

○**김영숙 위원** 그런데 행정직과 연구직 비율을 보면 서로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도 연구직의 비율을 좀 늘려야 된다, 또 연구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정책 개발, 해결할 문제……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든가 이것 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또 일본 독도영유권 문제, 이것 해결하려면 재단 설립 취지에 부합되는 편성을, 인력 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사업에 보면 외국교과서 왜곡 대책과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김영숙 위원** 그다음에 동북아역사재단의 여론 심층 분석 및 국제지지 여론 조성 역사교과서 왜

곡 대응 이것에 한 26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다고 보면 모두 역사교과서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 같이 통합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이 돈, 그러다 보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비효율적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딱, 그야말로 어디가 더 중요하냐…… 저는 볼 때 교사교육센터, 교육대학, 교사교육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마는 하도 여기가 없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통합을 하게 되면 예산이 긴축적으로, 더 잘 효율적으로 배정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통합 배정을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아시는 대로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이고 그래서 그에 대한 역사 왜곡 이런 것은 고쳐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슨 중앙아시아를 한다든가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우리나라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김영숙 위원** 장관님, 지금 당장 급한 게 중국의 동북공정, 이것 바로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는게요? 그런데 뭐 이것저것 왜 다른 것 주변 것을 자꾸 둘러댁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여러 해 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김영숙 위원** 여러 해 전부터 뭘 해 왔습니까? 뭘 해 왔어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 나라들의 교과서를 분석을……

○**김영숙 위원** 작년에 고구려연구재단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심층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또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동북아연구재단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하려고 해요. 하려고 하는데 뭘 해 왔다는 겁니까?

지금 그 분야에……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이미 러시아 미국, 여러 나라의 교과서를……

○**김영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

관님께서 더 얼마나 심각한 것에 와 있는지……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하니까. 거기 보면 여러 가지가 설치되어 있던 호텔도 없어요, 지금 야단입니다.

역사 보면, 발해도 그렇고 지금 역사가 전혀…… 학생들은 또 인지 면의 역사의식…… 지금 국사교육 강화 결의안이 됐는데 그것도 흐지부지 되어 가지고 있어요. 독립 교과가 생긴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역사 교육·의식, 아이들에 대해서 정체성 문제에서도 애들 교육에 대해서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두산의 호텔들 다 없어지는 것 보세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 일본이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것, 물론 심각하고 중요합니다. 동시에 중요한 것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훨씬 영향력 있는 나라들이 그들에게 우리 역사를 잘못 가르치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래서 그것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부터 이미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개는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가 다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면 예산에 더 효율적으로 될 것이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혹시 통합 가능한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다음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해규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시간을 너무 잘 지키서 가지고 아주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김영춘입니다.

부총리님 제가 지난주에 본회의 대정부질문할 때 교육 분야를 놓고서 총리께 질의하는 것 들으셨지요, 그 자리에서?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제 요지는 인구 자연감소, 취약

학생들의 자연감소에 무임승차하지 말고 우리나라가 교육 인적자원 개발에 발전의 사활을 걸어야 되는 나라이니만큼 적어도 OECD 평균 정도의 수준으로는 재정 투자를 늘려야 되겠다 그런 요구였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부총리께서도?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저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더라도…… 물론 지금 7.2%가 증액이 됐나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7.2%입니다.

○김영춘 위원 그 정도 증액된 예산이고, 다른 정부부처 예산하고 그냥 수평적으로, 기계적으로 비교해 보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평균 보다는 더 늘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렇기는 합시다마는 그런 정도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어렵도 없는 예산 부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부의 보고자료에 봐도 교육비 투자 전체로 보면 OECD 평균보다 높는데 그중에는 학부모들의 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거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우리가 2.9%, OECD 평균은 0.7%인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이것 뭐 비교가 안 되는 학부모의 과중한 부담…… 이것이 사교육비 부담을 뺏아줍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니 이것이 나라가 제대로 될리가 없습니다.

PISA 평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마는 저는 그것도 사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한 4학년 이상부터는, 그 이하의 저학년부터도, 대부분 다 사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 그 PISA 평가니 하는 것도 적어도 초·중·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것이 공교육의 실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낮간지러운 면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지난주 본회의 질문 때는 OECD 평균하고 비교하는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OECD 이외의 국가들, 예를 들면 인구 대국이고 우리보다 훨씬 경제 수준이 나쁜 중국하고 비교해 봐도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숫자는 우리가 중국보다 많습니다. 2005년 통계입니다, 이것이. 이것 심각한 거지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20년 목표 학생 숫자가 학급당 초등학교 28명, 중학교 29.5명 이런 식입니다. 이것 안 되는 거지요? 이런 목표를 갖고서 우리가 교육에 목을 매단다, 전력투구한다 말할 수 없는 거지요?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더 확실하게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김영춘 위원 비상한 판단, 또 정책적 결단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이것 물론 부총리 혼자서 될 일은 아닙니다. 이 점을 대통령과 좀 상의해서 올해 예산은 이렇게밖에 못 짜더라도 내년도 예산편성만큼은 이렇게 안 되도록 부총리께서 대통령과 담판을 지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일단 드리고 내년도 것만 우선 좁게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사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육부 예산안을 보면서 참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 라는 점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어요.

우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는 성과급 예산, 이것 부총리께서 시정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저는 이런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서 제가 국회의원이라고 스스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예산 심사와 승인인데 이런 예산을 승인시켜 주는 국회, 그 존재 의의가 없습니다.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올해만 4800억 원을 썼습니다, 성과급에. 그런데 성과급 근거 법규가 뭔가 하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업무 실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업무 실적을 보이고 성과를 보인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가지고 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쓰고 있는, 올해 지급 완료할 예정인 4800억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적법하게 지급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성과급의 본래 계획대로는 진행을 못 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부에서 애초에 2001년도에 이 제도를 도입할 때 교육공무원들, 특히 교원들을 이런 식으로 성과 측정을 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들었습니다, 애초에. 그런데 이것이 밀려서 여기에 온 겁니다. 이제 와서는 교육부에서는 아마도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교원들한테 수당을 더 올려 주는 결과가 되는 거니까 중앙인사위원회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 등등 성과관리체제 전반의 밀어붙이는 경향 속에서 은근슬쩍 편승해 가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줄 돈이 있으면 그 돈은 교육여건 개선 투자, 또 지금 부족한 교원들을 증원하고 그런 투자……

지금 학생 1000명당 교원 숫자 이런 것을 비교해 봐도 지금 OECD보다 한참 모자랍니다. 2020년도 정도의 목표 숫자를 봐도 그래요. 그래서 교원도 더 늘려야 됩니다. 시설 개선 더 해야 되고요. 사업도 더 벌여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 가까운 돈들이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불법적인 성과급 예산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횡령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교육부장관께서, 부총리께서 중앙인사위원회에 ‘교육부는 2007년도에 이 규정에 의해서 도저히 이 예산은 집행할 수 없다’라고 의견 제출해 주세요. 그러고서는 국회와 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다시 의논을 하셔 가지고 그 돈만큼은, 어차피 재원은 다른 데서 주는 게 아니라 지방재정교부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 교육세 수입 등 이것이 재원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부가 예산 지침으로 다른 사업에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지금 교육부가 만들어 놓은 2007년 예산안의 총액만큼은 우리가 절대 축소되지 않게끔 하면서, 제한된 시간입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예산 기본구조, 특히 성과급을 중심으로 예산 구조는 바꿔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 혼자서라도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들의 동의를 구해서 절대 이런 국회의 권한 그리고 임무를 방기하는 예산안 통과를 방조하지도 않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김영춘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성과급이 애초에 생각했던 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부문의 활동과 질적으로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김영춘 위원 질적으로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성과급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아닙니다. 그러나……

○김영춘 위원 지금 교육부에서도 교원 평가를 하면서 성과급하고 연결 안 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입장이?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아닙니다. 이것은 성과급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다만 같은 기준으로……

○김영춘 위원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원 평가 제도에 대한 반발이 있으니까……

저는 성과급이든 뭐든 할 수만 있으면 평가를 제대로 하면 그 평가가, 이 성과급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보수나 승진 인사하고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연수에만 활용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물론 반대에 부딪쳐서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은 못 하고 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교원단체를 설득해서 이것을 하고자 하고, 그래서 그 성과 측정의 기준에 이견이 많아서 그것을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이면 그 연구가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교원단체들과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여하튼 교육 분야 특성에 맞는 성과급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계속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김영춘 위원 저는 회의적입니다, 어떤 개선안이 나올지는 몰라도. 교사들을 S·A·B·C급으로 나눠서 성과급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 이렇게 해야지요. 적격 교사—좋은 교사—와 부적격 교사로 나눠서 부적격 교사는 퇴출시켜야지요. 개선의 기회를 주되 안 되면 퇴출시

켜야 되는 거지요. 나머지 교사는 다 좋은 교사들, 성과를 따져서 차등시키기 어려운 교사들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제대로 된 교육철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논란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성과급 부분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특히 교육공무원들은, 교원은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예산 승인하는 과정까지 며칠 없습니다마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 구조개혁 사업 예산입니다.

그중에서 두 가지 사업인데, 국립대 통폐합 사업과 다른 구조개혁 사업이 있는데, 국립대 통폐합 예산이 내년 예산은 350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김영춘 위원 전체 구조개혁 예산은 600억 원이고 그중에 350억인데, 문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적절하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05년도 예산도 채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06년도 예산도 거의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김영춘 위원 특히 국립대 통폐합 예산은 '06년도 예산도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있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작년에 제가 예결위 계수조정 하면서 “뭐 이러냐, 이 예산집행 실적이지?” 그랬더니 잘 될 거라고 교육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00억만 감액시켜서 통과시켰더니 뭐가 잘 됩니까? 지금 이것 작년에 우리가 걱정했던 대로 '06년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이런 실정이니 원래 국립대 통폐합이라고 하는 그 사업목적과는 별로 부합 안 되는 통폐합 합의도 막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05년도 사업도, 이미 승인해 준 사업들도 교육부가 용역한 연구보고에 봐도 원래 취지대로 잘 안 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잖아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이것이 취지와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가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07년도 국립

대 통폐합 예산 350억 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이것 전부 다 삭감해도 '06년 예산 남아 있는 것, 심지어 '05년 예산도 다 못 쓸 것 같은데 이걸로 충분해요, 예상컨대 지급 추이로 볼 때.

교육부에서도 앞으로는 이제 사업승인 해도 그 익년도부터 사업비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은 전액 다 삭감을 해도 아무 지장이 없는 예산이라서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부총리께 의견을 여쭙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육부가 뭐라고 그러든 잘못된 예산 책정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허용하시면 제가……

○**김영춘 위원** 짧게 좀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물론 모든 대학, 가만 놔둬도 결국 시대적 상황과 학령 인구 감소에 의해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놔두기에는 국가 전체의 교육계획에 낭비와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도 대학을 설득해서 미리미리 상황에 대응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임해규 간사, 권철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거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김영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추진은 안 되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대학을 설득해서 이 시대 변화에 빨리 바꾸도록 노력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오히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년 예산을 다 삭감해 버리면 지방 국립대학들이 '아, 이것 잘못하면 그런 기회마저도 없어지겠구나'라고 경각심 가지면서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밀도 있는 통폐합 논의가 진행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경각심을 주지 않으면 마냥 그냥 백년하세월이고, 또 서로 무슨 협의를 하고 합의를 보더라도 이 목적과는 배치되는 합의를 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교육부는 억지로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저는 시범적으로 내년 예산을 다 삭감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의 마지막 순서로서 이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 위원** 저도 이어서 대학 구조개혁 사업

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께서 제안하신 국립대학 통합지원 전액 삭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덧붙이면, 이것이 사실 정부가 통폐합을 유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통폐합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고등교육대학기관들의 제대로 된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이 구조개혁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속 빈 강정식 구조조정만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대학 통폐합, 정원 감축 이런 것만을 지표로 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식이 되다 보니까 교육부의 재정지원만 바라보는 외부의존형 타율적 구조개혁만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합치고 보자는 식의 날림식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폐합된 실적들도 있지만 정말 상당히 우려됩니다. 이런 식으로 통폐합을 하려면 왜 하는지를 모르겠고, 왜 정부가 이 돈을 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요. 이런 식의 통폐합에 정부가 예산 지원하는 것은 정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액 삭감 요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전체 600억인데 250억이 뭔가 하면 구조개혁을 선도하는 국·사립대학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도 보면 이것도 정말 저는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대학 간 양극화 현상,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식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립대 경우에 서울대, 부산대 등이 지원되고 있고 사립대는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부가 원하는 식의 구조개혁에 따라가는 대학들을 지원한다는 명분이지만 사실은 이런 대학들은 자체적인 경쟁 여건하에서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도록 노력하는 식으로 되어야지 정부의 지원과 연계하는 식의 정책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조개혁 선도대학 재정지원 예산 250억의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반면에 저희들이 지금 반드시 고등교육 쪽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국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간강사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번에 고려대학의 더 타임즈지 순위에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교수확보율이 우리나라 대학들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세계 우수 대학과 경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간강사를 법제화하고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간강사 분들도 교수 못지않게 중요한 교육 역할을 맡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제대로 된 처우가 안 될 때 우리 교육의 질도 그만큼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외국에서 평가기관들이 볼 때도 사실 '이것 참 어이없다' 하는 식의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시장 양극화 이야기하면서 교수 인사 문제에 있어서 이런 식의 불합리한 양극화를 언제까지 그냥 두겠습니까?

또 제가 그저께 시간강사 분들이랑 정책토론회를 했습니다마는 이분들 대다수의 지적이 시간강사 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현대판 노예다, 다 눈치 보고, 윗분들 저기한다고 목소리도 변변히 못 내니까 처우개선이 계속 지연되고, 교육부는 사실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소리 높여서 주장하는 그룹이 없으니까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하고 있다 하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에서는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될 것으로 보고요.

앞에서 김영춘 위원께서 지적하신 350억 국립 대학 통합 지원 전액 삭감액과 또 구조개혁 선도하는 국·사립대학 지원 전액 삭감액을 전체적으로 돌려서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으로 가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보다 효과적이고 지금 당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잠깐 대답해 보시지요. 시간강사 부분만 대답하시지요, 앞의 것은 대답하셨으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이주호 위원께서 아시는 대로 대학의 강사료는 대학의 일반예산과 그다음에 기성회비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대학이 강사료를 증액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시는 대로

정부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학으로 하여금 강사료를 증액하도록 계속 권고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위원 그래서 그런 정책과 더불어 저희 예산에 본격적으로 편성해서 대학들이 하루라도 빨리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노력하겠습니다.

○이주호 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국감 때 지적했습니다마는, KERIS에서 하는 국내 대학 박사학위 논문 및 학술지 논문 DB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중복이 심각합니다. 학위논문 같은 경우에는 국회도서관을 활용하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DB가 되는 것이고, 학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KCI 사업을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도 전액 삭감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대학입시 관련해서 국감 때 계속 지적했고, 사실 대정부질문 때도 기억나시겠습니까마는 지적했습니다마는 대입 사정관 제도 도입을 위해서 예산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내내 이것 하시겠다고 계속 립서비스만 하셨는데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빨리 제대로 도입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입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상담교사단 운영 및 대학입학 관리·지원, 대입 전형 기본계획에 대한 예산 5억 5000, 대입 전형 기본계획 사업에 2억 7000 등이 있는데 이 세부 내역들을 보면 대부분이 회의비나 정책개발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학 현장의 학생 선발의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돈이 쓰여야 되는데 회의비나 정책개발비 정도로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주로 그것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학 입학처장들 불러 놓고 내신 반영 비율을 높여라, 낮춰라 한다든지 논술 문제를 쉽게 내라, 어렵게 내라, 이것이 사실 제대로 된 교육입시 정책 방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연구 같은 경우에도 반영도 하지

않을 것을 계속 비슷한 주제로 반복해서 연구만 시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좀 현장에 실용성이 있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대학 자율화, 대입 자율화의 취지에 맞는 개별 대학의 입시사정관 제도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예산은 앞에서 언급했던 논문 DB 구축사업 삭감분 전액과 현행 대입 지원 예산 중에서 제가 지적했듯이 회의비, 정책개발비 중에 줄일 것들은 줄여 가지고 입학 사정관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가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언뜻 보면 KERIS의 데이터베이스와 국회 데이터베이스가 좀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원님이 아시겠습니까만 국회 데이터베이스는 말하자면 내용 확인하고 요약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거기 비하면 KERIS는 학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훨씬 더 가공을 한 그런 데이터베이스여서 그 2개를 동시에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오히려 KERIS의 이 사업을 좀더 확대시켜 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입 사정관 문제는 물론 급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정상적으로 모든 대학이 되어 할 전문 직원이어서 이것을 처음부터 정부가 돈을 주어서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학에 계속 사정관을 두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위원 그래서 대학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부가 지원을 하느냐 하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좀 부총리께서 제대로 인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통폐합하는 데 돈 주고, 정부가 마음에 들면 평가해 가지고 돈 주고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대학의 기능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식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부작용이 없는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려면 필요한 시간강사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된 지원책을 실시하고, 또 지금 입시 사정관 같은 경우에는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빠듯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인건비 지원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대학 사

회에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해 가지고 계속 미루는 것은 그것은 저는 논구가 굉장히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R&D 지원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것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인건비 지원, 특히 대학입시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계속 대학입시 문제가 우리 교육의 발목을 다 잡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시 사정관에 대한 지원 예산 편성을 대학입시를 총괄하고 계시는 교육부총리께서 소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말씀드린 대로 정규 직원으로 채용되어야 될 사람들이고 그래서 앞으로 대학 평가, 여러 사업을 지원받아서 평가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강사로 문제, 그다음에 입학사정관 문제 그런 것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가 항목에 넣어 가지고 반영하는 정도가 아니고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 예산에 포함시켜 하라는 거거든요. 국회에서 논의해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초학문 지원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학에 대한 지원 방식인데요, 대학교수 분들의 SCI 논문에 대한 연구 지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SCI급 논문이 최근 몇 년간 상당히 많아졌고, 그것이 교육부가 오늘 보고 할 때도 주요 실적으로 보고가 되셨는데요.

이런 SCI 논문도 중요하지만 기초연구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민간부문에서, 대학부문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힘든 인문학에 관련된 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굉장히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인문학의 위기라는 문제 제기도 많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제가 그래서 인문 계열 분야 학술지나 이런 자료들을 죽 봤는데요, 진짜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술진흥재단 국제학술지 발행 지원 사업 학문 분야별 현황을 보면 국제학술지 지원인데요, 인문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개밖에 없습니다. 전체 38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동북아 공정이나 이런 것을 대

비할 때 인문 분야의 국제학술지 같은 것은 정말 중요한 매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빨리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인문학에 대한 정부 지원 액수가, 지금 인문사회 학술연구 조성사업 예산이 1300억 원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 R&D 예산이 거의 10조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1300억만 지원한다는 것이 사실 문제가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염려하신 대로 인문학이 지금 매우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과학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 이것을 구호로 해 오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보고,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인문학을 강조하고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몇 가지 기본적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위원 제대로 된 예산 지원이 반드시 따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편성된 것을 보면 100억 증가분을 해 놓으셨는데 그중에서 20억은 실제로 별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던 대학교수 해외 방문 연구지원사업을 돌려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증가는 지금 8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 물론 예산이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다른 분야를 좀 절약해서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방법은 보니까 학진의 출연금 예산을 보면 기본 사업비는 지금 7.7% 감소했는데 인건비는 오히려 10.2%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원은 오히려 줄었는데 경직성 경비는 증가한 그런 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진의 인건비를 한번 제대로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초과학 및 인문사회학 출연연구 조성사업 총 출연금 3110억 중에서 이자수입 20, 30억이 발생하는데 이자수입에 대한 지출계획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제대로 된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인문학에 대한 예산 증액은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초과학 지원에서 빼 와 가지고 인문학을 채워 넣는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는 이런 식의 지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과학은 기초과학 나름대로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초과학의 예산 지원은 그대로 가면서 인문학에 대한 예산은 늘리는 방식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 부분이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7년 예산의 증가율로 보면 자연과학보다 인문학이 조금 더 늘리기는 늘렸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구상하는 사업은 가외 예산으로 확보해서 자연과학 쪽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호 위원 오늘 몇 가지 지적된 예산 삭감액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삭감해서 인문학 지원 쪽으로 돌리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각 부문별 구체적인 심의에 들어갈 텐데요. 교육부총리께서 방금 말씀드린 여러 분들이 지적한 인문학 분야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증액을 얼마나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교육부에서 좀 제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회)

○委員長 權哲賢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위원 최재성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재정이 일각에서는 파탄지경이라고 하고, 또 그런 주장까지는 동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교육재정이 아주 어렵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를 심의대로 정말 이런 기조에 맞게, 그런 의견에 맞게 잘 심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교육재정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서도 두

차례나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교육부에서 좀 집중을 해서 그런 해결책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최재성 위원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는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예측이 조금 차이가 나고요. 올해보다 조금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세수가 결손이 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인데 작년, 재작년도 힘들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더 힘들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산심의에서 단발성 사업이라든가 또 그렇게 필수적이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몸집을 줄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국립대학 통폐합 사업에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 대학 구조개혁 지원사업에 국립대학 통폐합 사업하고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인데 내년부터 구분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최재성 위원 그래서 국립대학 통폐합 사업이 애초 교육부가 얘기한 것은 2개 이상의 대학이 단일대학 체제로 전환하여 특성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 위원 11월 6일 승인된 강릉대와 원주대의 통합처럼 특성화와 근본적으로 거리가 먼 통합안을 내온 대학에 지원을 한다면 이것은 교육부의 어떤 정책 추진 의도나 이런 것이 스스로에 의해서 왜곡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정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2005년, 2006년 예산 중에 미집행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 부분은 어차피 용처가 있을 텐데요. 그것이 무슨 불용예산이나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렇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러면 어차피 내년이라도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최재성 위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까? 2005년, 2006년 예산 중에 쓰지 못한 예산을 집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느냐 하는 거지요. 그것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해 예산 건. 그것 누가 잘 아시는 분이 대신 얘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아까 오전에 위원들이 좀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처가 있는 예산이라면 그 예산 가지고 2007년도 통폐합 지원사업을 대체한다는 게 논리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교육인적자원부대학혁신추진단장 박창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러면 박창신 단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 위원 예.

○교육인적자원부대학혁신추진단장 박창신 대학 혁신추진단장 박창신입니다.

○최재성 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교육인적자원부대학혁신추진단장 박창신 예.

국립대학 통폐합 지원사업은 06년도의 경우에 350억, 거기다 또 새로 들어온 대학 해 가지고 금년도의 경우에 구조개혁 선도대학 사업은 150억하고 100억 해서 250억이고요. 나머지는 350억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되는데 용처는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위원님.

○최재성 위원 정해져 있겠지요. 그런데 집행하는 데 착오가 없겠냐는 거지요.

○교육인적자원부대학혁신추진단장 박창신 집행하는 데는 착오가 없습니다.

○최재성 위원 지금 국립대학 통폐합 작업이 스케줄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5년도 예산이 예측치보다 남은 것 아닙니까, 또 작년 예산도 마찬가지로? 2005년 예산은 한 35% 정도 남은 것이지요? 30% 정도인가요?

○교육인적자원부대학혁신추진단장 박창신 예.

○최재성 위원 그리고 작년 예산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대학혁신추진단장 박창신 2005년도 예산은 금년 말까지 다 나가고요. 2005년도 예산이, 양쪽 대학을 보면 6, 7개 해당 집단이 있기 때문에 통폐합에 서로 의견이…… 그래서 2005년도 말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다 쓰이고요. 2006년도 예산은 금년 말에 가서 내년도에 다 쓰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 2005년도 것도 아직 안 쓴 게 있잖아요.

○**교육인적자원부대학혁신추진단장 박창신** 금년 말까지 다 집행이 됩니다, 2005년도 것.

○**최재성 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뭐니까? 이렇게 적시에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통폐합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건가요?

○**교육인적자원부대학혁신추진단장 박창신** 어려움 때문에 지금 밀려서 온 겁니다.

○**최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나 하면, 국립대학 통폐합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만들어 놓고, 통폐합의 흥내만 내도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오히려 교육부가 달려가게 되는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최재성 위원** 이것 하나 염두를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제가 국감에서도 얘기했지만 원주대, 강릉대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통폐합의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 또 교육부 스스로 천명한 것에 대해서 위배되는 건데 이것을 지원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국회에서 지적을 했으면 이것에 대해서 시정안을 내오고, 또 통폐합을 새로운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이런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발표했지 않습니까, 원안대로? 그러면 국회에서는 예산 못 주는 겁니다.

강릉대, 원주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원주대와 강릉대의 관광과를 통합하면서 강릉대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9명의 학생들이 딸려가고 나머지 30명의 학생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여성인력개발과로 배치가 돼요, 학생들이. 그리고 언어학과 교수들도 여성인력개발과로 배치가 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나는 거예요. 여기에 돈을 준다? 저는 이게……

부총리님, 어때요? 그게 맞는 경우인지, 통폐합의 어려움을 전제하고라도……

여성인력개발과가 뭔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김교홍 위원님도 거기에 나가서 강의하

시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면 별짓이 다 일어납니다. 이제 여기에 정원 채우려고 공무원들 와서 입학하게 하고 특전 주고, 우리가 누리사업이나 이런 것 요건 충족하려고 70대 노인네들 입학시켜서 요건 충족하고 이런 경우 많이 봤지 않습니까? 여성인력개발과에 제 돈 내고…… 정원이 70명으로 불어났어요. 이게 무슨 구조조정입니까?

그러면 이 과에 와서 그 많은 등록금 내고 배울 사람들이 누가 있냐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은 행정직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 유도하고, 동네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활동하는 어머니들 유도하고 이렇게 해서 정원 채운다고요. 그것 볼 보듯 뻔한 일인데 이걸 통합 과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총·학장들이 합의했다는 이유로 이것을 묵과하고 여기에 또 예산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지금 최재성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통폐합사업이 그렇게 계획했던 대로 매끄럽게 진행되질 않습니다, 각급 관련 대학, 또 학과, 개인들이 반발도 하고 그래서. 그래도 그것을 이제 구조적으로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좀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통합을 계속 미루는 것보다는 우선 통합을 하는 것이 그래도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는 하나의 방편이라 생각하고요.

그런 다음에 통합했다 그래서 그것으로 통합이 끝난 것은 아니고 물리적으로 하나의 대학으로 되었지만 내부 조정은 계속 진행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요구하면서 통합한 그것대로 되지가 않으면 보조금을 삭감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애초에 목적인 대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성 위원** 이것은요, 연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기 통합안은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최재성 위원** 두 대학 간의 총·학장들이 합의를 했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성인력개발과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요구를 해 주십시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최재성 위원** 그리고 이것을 지원하고 연계를 해야 돈을 안 쥐도 명분이 있는 겁니다. 그냥 하라고 해 놓고, 교육부에서 오케이 해 놓고 돈을 안 준다, 이것은 의회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교육부에서는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왜 안 쥐야 되는지, 왜 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명분 축적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이 내년, 후년 연이어지는 과정에서 이것을 조정해 낼 수 있는 대안을 그래도 교육위원들한테 제출을 하셔야 정부하고 정책 협의나 이런 예산 협의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국감에서도 지적했는데 아무런 액션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 달라…… 저는 그것은 정말 금도에 어긋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안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평가해서 조절하면 된다’ 이것은…… 그런 게 참 어렵다는 것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여성인력개발과라든가 이런 잘못된 구조조정 방안, 통폐합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해 나갈 건지 제시를 하면서 예산심의 과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알겠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다음에 대학자율역량 기본조성 사업으로 대기업에서 DB 구축사업에 23억 5500만 원인데 이것 꼭 필요합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동안에 국회가 물론 이것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내용을 전문학자들이 활용하기에는 DB의 구성들이 활용하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정보연구원에서……

○**최재성 위원** 뭐가 어려운지 좀더 파악을 하시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최재성 위원** 그리고 기존에 국회에서 납본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고,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학자들이 전문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부처 협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강화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게 꼭 해야 된다면 반드시 해야 되고요. 다른 보완책이 없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알겠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다음에 BK21사업에서 글로벌

캠퍼스 지원사업이 있는데 총 20억 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10억 되어 있는데 그런데 BK21사업에 선정된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에서 2, 30% 정도를 국제협력 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최재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첩이 되거든요.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첩되는데 굳이 따로 항목을 설정해서 10억을 또 쥐야 되는지…… 그런데 BK21사업단에 선정이 되면 2, 30%를 이것으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최재성 위원** 그래서 이것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글로벌 인턴십은 주로 외국기업의 인턴십을 위한 것이고요. 사업단 수행 국제협력은 주로 해외 학회 참석, 이런 쪽으로 쓰는 것이어서 실제 프로그램은 좀 구분이 됩니다.

○**최재성 위원** 검토를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혹시 중복되는 것이 없나 그런 것은 잘 살펴보겠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이 있었는데요. 학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이 86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심사평가운영비 있잖아요, 스타 패컬티 운영비를 통해서 재단 인건비 등 기관 운영비 또는 재단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그전에 지적을 했는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위탁 운영하는 연구조성사업의 기획심사평가운영비 편성을 보면 기획심사평가비로 62억, 인문사회 학술연구 조성사업 기획심사 평가비로 45억, 그래서 기초과학·인문사회 학술에서 약 100억 이상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탁사업비에서 기관 운영비 또는 재단 고유목적사업비가 충당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 관리를 해야 될 사안들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최재성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부 초청 장학생 교류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확대 실시하는 것이 국익에도 좋고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6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

당히 부족하거든요. 배로 늘려도 시원찮을 판인 데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 늘리는 것이 과제입니다.

물론 정부의 지원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겠고요, 다른 한편으로 여러 민간 재단들로 하여금 이제는 해외로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국내로 유치하는 이런 장학생 선발이 강화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의지가 있을 때 민간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차관을 공여하는 문제도 그것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그 항목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부에서 불필요한 예산들을 일부 줄여 서라도 이것을 확보하는 의지를 보여 주고 그다음에 민간 참여나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경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안에서는 그런 흔적들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예산 중에 혹시 감액하거나 혹은 삭감해야 되거나 없애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을 좀 미세 조정을 해서라도 확보를 일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정부가 월드뱅크에 기여금을 30만 불로 늘려서 내는데 그것의 중요한 부분을 교육을 위한 외국 학생 유치하는 장학금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재정부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 하여튼 그것은 좀 다른 품목이거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하고 있는 것 활용방안 두 가지 정도를 제시했는데,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서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그것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적인 경로로 활용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헌 위원 국제화 시대에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교육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작금의 국제화가

로컬리제이션을 기반으로 정체성 확립을 가진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야 국제화 시대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 언어 교육과 역사 교육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2007년도 교육부 예산 가운데 우리 언어 교육과 역사 교육에 할애된 금액은 전부 어느 정도 됩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산을 교과별로 나누어서 편성하지 않아서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문헌 위원 본 위원이 언뜻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 역사왜곡대책 및 한국 바로알리기 사업의 221억과, 동북아역사재단 운영비 201억 포함해서 국편에서 한국사 연구 및 자료 수집 편찬 사업비 50억, 학진에서 고전국역사업 49억 등이 있는데, 이런 항목 외에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제가 대충 보니까 이런 항목인데 ‘이런 부분 우리 국어 교육 위해서, 역사 교육 위해서 지금 예산 잡혀 있다’고 말씀 주실 부분 있습니까? 다른 부분은 특별히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우선 국어 연구와 국어 교육에 관한 것은 문화부에서 지금 그 사업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글학회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그쪽하고 더 강화를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좀 간접적으로 연결이 됩시다라는 지금 논술 문제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 논술은 꼭 입시 문제로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초·중등 학교 가르치는 데서……

○정문헌 위원 국어 교육으로도 필요한 부분이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 점에 좀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정문헌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어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주축이 되어서 할 것인지, 문화부에서 주축이 되어서 할 것인지 심도 높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하튼 제가 지금 본 가운데는 역사 알리기에 대해서는…… 우리 역사를 외국한테 알리는 사업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자신감도 없으면서 외국한테 알리는 사업은 예산이 있는데 우리 내에서 한국 역사체험이라든지 현장실습이라든지 우리 역사 바로 알기를 지원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예

산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깥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도 지적했듯이, 그때 제가 고구려재단에서 나온 책 예를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것 바깥에 알려지면 이것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쪽 안에서 연구하고 우리 안에 우리 역사를 알리는데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일례로 지금 고전국역사업에 49억 정도가 투입되고 있는데 민족문화추진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전통문화연구회, 이런 데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예산을 더 늘려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발상이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지금 사단법인 상고사학회 같은 데서 삼국사기를 번역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로 예산이 더 늘어나고 더 다양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알겠습니다.

○정문헌 위원 그리고 아까 먼저 번에 이주호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김영춘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2005년도에 대학을 선정하여서 2006년도에 지원을 시작한 대학 구조개혁 지원 및 국립 교육대 지원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특성화를 통해서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유사 학과·부 통폐합 및 정원 감축 등 지역과 대학 내 강점 분야로의 자원 재배분 과정을 지원해서 교육여건 개선,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올해에도 한 600억 정도 지원할 예정이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정문헌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왔듯이 지금 이 사업이 2006년도 9월 말 현재 집행 비율이 64.1%에 불과하고, 또 서울대의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강의 보조 및 우수 대학원생들한테 지급함으로써 이 근본 목적에서 좀 벗어나고 있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정했던 스케줄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문헌 위원 여하튼 국립대학 통폐합의 궁극적인 목표, 그다음에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의 기본적인 배경은 국립대학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지속적 발전의 잠재성을 유지시키고 발양시키는 것임은 분명하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특성화를 위해서……

○정문헌 위원 그것을 위한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정문헌 위원 지금 교육부의 국립대 통폐합 및 구조개혁 선도대학 사업의 경우 예산 지원은 주로 당근책만 제공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 사업의 예산 항목을 교비에 편성해서 자유롭게 쓰게 만드는 부분이 바로 당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대학 구조개혁 지원사업의 성패가 곧 대학 경쟁력과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미래가 달린 사회적 문제임이 맞지요?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 구조개혁 지원사업의 성패가 곧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학 경쟁력과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미래의 문제가 달린 그런 정책인 것 맞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런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문헌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지금 계속 예산이 당근으로서만 사용되면서 전혀 기능을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각종 채찍, 교육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예산상의 채찍을 동원해서 국립대학의 통폐합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속도를 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역시 또 대학에 대해서 지나친 외부 간섭은 오히려 능력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조절하고 있다고……

○정문헌 위원 그런데 지나친 외부 간섭이 아니라, 일단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는 부분을 인식해 주시고요. 국민들이 살기도 어려운데 혈세가 투입돼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대학의 구조를 경쟁력 있게 바꿔 주십사 투입되는 혈세이고, 이것이 적절히 사용되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삭감함으로써—이것 전액 다 삭감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정부 정책의 의지를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은 국공립대학 통폐합을 통한 구조개혁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세간의 관심사이자 이해당사자 간에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 것이 국립교대와 사대 간의 통폐합이

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교대·사대 간의 통폐합이 교육정책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며 향후 필연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어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장기적으로 보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사를 위한 교육대학과 중학교사를 위한 사범대학이 워낙 다른 체제로 오랫동안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무리하게 통합하는 것은 역시 어렵고요, 그 양쪽 간에 지금 대화를 통해서 서로 자발적으로 이해하고 통합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렵긴 합니다마는.

○**정문헌 위원** 자발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안 될 경우는 정부가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부총리께서는 근본적으로는 좀 어렵지마는 통폐합으로 가야 된다는 인식에는 동의하시는데 같은데……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렇습니다.

○**정문헌 위원** 올해 책정된 예산을 보면 교육대 시설확충비로 37억 정도, 그다음에 교육환경 개선에 138억 정도, 신축 건물 비품비에 2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예산지원이 당사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메시지 전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교대는 통폐합 없이, 구조개혁 없이 버티기만 하면 앞으로 죽 별개로 유지되면서 갈 것이다 이렇게 당사자들에한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정문헌 위원님 지적하신 그 점을 저희들도 늘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설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그런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정문헌 위원** 1개의 국립대학이 가질 수 있는 캠퍼스 숫자에 상한선이 있습니까? 지금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현재로서는 상한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헌 위원** 예컨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사례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만일에 공주대랑 충남대가 통폐합되고 공주대 내 사범대와 공주교

대가 통폐합되면 공주대는 천안과 예산에 각각 1개의 캠퍼스, 그다음에 공주에 본교를 포함한 3개, 그리고 유성에 1개, 그래서 6개의 캠퍼스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현재 시설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공주교대도 매각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속적으로 이런저런 것 다 고려 안 하고, 지금 예산 편성한 것 보면 지속적으로 그냥 교대를 지원하는 맥락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예산은 정부가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사범대학과 교육대의 통폐합이 지향해야 될 길이고, 그렇다면 정부가 예산편성 이런 부분으로 하여금 잘못된 메시지가 가지 않도록 이 부분 좀 정확하게 판단해서 일정 부분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한일역사공동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9억 8000, 예산이 또 더 올랐습니다. 4300만 원 올랐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필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예산은 지금 공동위원회 움직이는 것보다도 우리 쪽 연구자를 지원하는 부분이 훨씬 필요하거든요. 이것 연구 쪽으로 돌리든, 안 그러면 전액 삭감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저출산 고령화 대책 예산 관련해서 가지고 저출산 문제랑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예산 반영을 하시는 부분은 참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총리께서 교육부에서 마련한 내년도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세부 내용 알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문헌 위원** 어떤 겁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자녀들의 교육을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고 또 교육부는 그 부분을 책임 맡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영유아기의 교육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문헌 위원** 저출산 고령화 대책 예산이 28억 4000만 원 증액되어서 568억 9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사이버 가정학습, 입양아 무상교육, 교내 폭력 예방, 이런 사업입니다.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요?

그런데 이 사업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학교 잔디운동장 확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잔디운동장에 279억,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51억 5000만 원, 이것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 잔디운동장 확대가 저출산 고령화랑 관계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것은 좀 무리하게 이렇게 구분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정문헌 위원 좀 그런 느낌이 있으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문헌 위원 그리고 문광부가 학교 잔디운동장 사업을 지금 체육진흥기금 81억을 투입해서 또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 좀 세목을 정확하게 맞는 사업에 편성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알겠습니다.

○정문헌 위원 그리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보면, 농·산·어촌 우수고교 육성사업을 2004년부터 추진해서 88개 군, 88개 고등학교를 선정해서 2007년에 조기집행하겠다고 계획을 변경 추진하고 있고 2007년에 30개 교에 대해서 241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알고 있습니다.

○정문헌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의 문제가, 50 대 50 비율로 국고·지방비가 같이 대응투자를 해서 진행되게 되는데, 2006년 30개 교 중 6개 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경기도 양일고, 강원도 양양고, 전북 순창제일고·백산고, 전남 구례고·보성고, 특히 전북 같은 경우에는 대응투자 확보액을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말씀드린 학교들이 다 대응투자를 3분의 1도 못 했고요. 이것이 지방재정이 열악해서 그런데, 기왕에 지금 우리가 농·어촌 고등학교를 육성하고 우수 인재의 도시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이 학교를 활성화시킨다면 현실 가능하게 지방재정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일정 부분 증액이 필요하면 증액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도권 대학 특성화 지원사업이 올해 600억으로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났는데요, 수도권 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1차연도 평가보고서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 자체는 제가…… 그러나 내용은 보고를 받았습시다.

○정문헌 위원 이것 보시다 보면 전부 예산 잘

못 쓰고 있다고 결정사항에 다 사업 조정을 시키거든요.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이 보고서가 보여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수도권 대학 특성화 지원사업도 엄밀히 검토해서, 이것도 지금 보고서 내용으로 보면 거의 전액 다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엄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원대학교병원 개보수를 보면 이번에 37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강원대학교병원 설립 계획을 보면 지방공사 춘천의료원을 인수해서 1개 병동을 증축하고 구병동은 개보수해서 400병상 규모의 국립대학병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설립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강원대학병원보다 늦게 시작한 제주대학병원의 경우에는 지금 이전 신축으로 예산이 160억 정도가 투입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대병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241병상으로 병실 및 진료 공간도 부족하고 진료·교육·연구도 대학병원으로서 정상적인 기능 수행에 지금 장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대학교병원 설립 계획에 근거해서라도 예산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빠졌습니다. 의료장비 확충사업만 37억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관 병동 개보수 사업으로 병동을 450실 정도 확보할 수 있게 132억 6300만 원,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초기 운영지원비 45억 정도를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께서는 각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 또는 지적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메모하셨다가 반영이 안 될 때는 왜 반영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들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조금 전에 국사에 대해서도 정문헌 위원이 질의해 주셨는데, 최근에 국사를 초·중등학교의 필수과목으로 하자, 또는 각종 시험에 필수과목으로 넣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칙적으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의 전제는 그 국사가 일체의 강압에 의해서 왜곡되어진 식민사관에 의해서 잘못 쓰여진 그런 국사라고 한다면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따라서 조금 전에 정문헌 위원이 삼국사기의 정역, 올바른 번역을 위한 곳 같은 것에 좀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삼국사기 안에 수천 개의 지명이 나오는데 그 지명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지금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교육부에 어떻게 예산 신청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가 막상 예산심의에 들어가면 그때 얘기하면 되겠지 하다가 안 돼 버린 예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작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다음은 김교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홍 위원 김교홍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기 전에, 부총리님 이번 주말쯤에 수능시험 본 학생들이 논술시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부터 문제점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서울 소재 명문대학의 논술시험을 보는데, 지방에는 논술학원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논술학원을 들어가려고 해도 이미 다 예약이 돼서 차 있고, 개인 과외를 받으려고 해 보니까 시간당 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부총리님 이것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국감 때도 계속 논술 문제 얘기했고, 또 2008년도부터 논술이 확대되고, 이것 정말 교육부에서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요새 언론에서도 계속 논술이라든가 수능, 입시제도 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 교육부에서 한번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잘못돼 버리면 또 제2의 부동산 대란처럼 갈 수가 있습니다. 교육 문제는 미묘하기 때문에 변별력을 찾을 수 없는 부분들을 잘 한번 보시고, 또 공교육 속에서 논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더 찾아보시고 이렇게 해서 논술을 되도록이면 공교육에서 소화시켜서 이것이 입시제도로 연결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제가 재삼재사 부락을 드리는 바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쪽으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교홍 위원 저는 누리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대학의 경쟁력도 높이고 또 지역에서 산·학·연 클러스터를 하면서 지역발전, 국가 균형 발전……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되었을 때 좀 더 인센티브를 제대로 줄 수 있는, 지금 보면 약 13억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인센티브를 주는 데 있어서의 프로그램,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원액을 좀 늘리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잘하고 있는 대학은 선택과 집중 속에서 더 지원해 주고, BK21하고 마찬가지로 이것이 나눠 먹기가 아니다, 정말로 지방대학의 경쟁력 있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성과물을 내는, 그래서 잘하는 대학에는 좀더 커다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거든요.

하나는, BT산업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아요, 지역별로 경북대 충북대 충남대 경상대 강원대. BT가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사실 FDA 승인을 받으려면 3상 실험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약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5개 대학씩 해서 지역에 클러스터를 한다고 하면 이것 성과물이 나오겠습니까,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학문 세계도 사실 유행이 있으면 안 되는데 어느 시기에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또 대학들……

○김교홍 위원 다 유행으로 가잖아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교홍 위원 그런데 대학은 유행을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교홍 위원 3상 실험하고 준비하려면 보통 BT는 30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텐퍼드대학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500억 원 정도를 예산 지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것이 우리가 생색내기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서 성과물이 나오는 것에 지원을 해 주고 제대로 하는 대학은 좀더 커다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리사업에서 잘못돼 가지고 탈락되고 또 다른 대학에 넘겨주고 해서 누리사업 학교 수를 늘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전시적으로 비추어지고 이래서 전시행정식으로 보이는, 이렇게 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 이것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그 지역의 특산물 또는 특성화 여기에 맞게 대학하고 연계, 이것이 좀더 연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김교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교흥 위원 그다음에 BK21도 같은 맥락인데요, 이것이 2006년도에 194개 사업단에서 290개 사업팀으로 선정되었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김교흥 위원 그다음에 내년에 244개 사업단에 325개로 증가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국감 때 BK21 목표 설정의 적정성에 대해서 교수님들이나 박사 후 과정에 있는 분들을 다 여론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저 그렇다’부터 ‘매우 부적절하다’가 7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BK21사업이 대학 개혁에 영향을 주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57.5% 정도가 약간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인데요, 좀 잘되고 있는 대학, 또 우수 대학 이런 것을 좀더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대학을 우수하게 키우고 거기 구성원들을 우수하게 키워서 대학 경쟁률을 높여야 되는데, 이것이 탈락되면 다른 대학으로 넓혀 주고, 팀도 늘려 주고 하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한번 부총리님이 잡으시지요. 이것을 안 잡으면 돈은 돈대로 들면서 실효성은 거들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제가 여론조사한 대상자들은 받는 수혜자들한테 제가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들은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부정적인 답변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부 정책을 한번쯤은 검토해 볼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이 좀 부족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들이 워낙 인프라가 약하고, 여러 가지 재정난 때문에 이런 것이 있으면 한 군데도 안 빠지려고 노력해서 교육부로서는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는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을 더……

○김교흥 위원 부총리님, 이것은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물론입니다.

○김교흥 위원 그렇지요? 아까 누리사업도 마찬가지로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김교흥 위원 그래서 좀 키울 만한 것을 제대로 키우고, 키울 사람들을 키우고, 대학을 키우고,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누리사업과 BK21은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교흥 위원 그다음에 사립 유치원 기본 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데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2007년도 신규로 32억 9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4만 2000원씩 기본 보조금을 사립 유치원에 준다는 것 아닙니까, 몇 개 선정 지역이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김교흥 위원 이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아이들 한 사람당 4만 2000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교사 인건비부터 해서 교육환경 개선비, 기타 등등 해서 항목이 다양해요. 그것은 원장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김교흥 위원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사립 유치원들의 질이 높아진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김교흥 위원님이 아시겠습니까라는 우리 유치원들의 말하자면 질적 격차가, 시설이나 이 격차가 굉장히 큼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것들이 부실한 유치원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기본은 갖추도록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지금 기본 보조금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흥 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데요. 예를 들

면 이 비용을 받아다가 임대료를 낼 수도 있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의 항목이 있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원장이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렇다고 해서 교사들의 인건비 올려 주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교사들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지금 국공립 유치원의 교사들은 보통 평균 월 200만 원 받아요. 그런데 사립 유치원은 한 110만 원 정도, 어린이집은 한 90만 원 받아요.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시설 여기를 안 다니는 아이들, 그러니까 미술학원에 한 20%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미술 유아원. 일반 아무 데도 안 다니는 아이들이 6%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렇습니다.

○김교흥 위원 그러면 시설에, 공급자에게 그것을 쥐 버리면 나머지는 전혀 그 정책의 수혜를 못 받는 거거든요. 우리 교육이 수요자 맞춤형 아닙니까? 수요자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수요자들이 유치원이면 유치원,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미술학원이면 미술학원을 선택하게 한다면 사립 유치원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선생님들 인건비를 올려 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을 왜 공급자에 줘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들이 너무 시설들이 빈약하고 격차가 많아서 우선 최소한의 수준까지는 높이는 것이 급선 과제여서 그렇게……

○김교흥 위원 부총리님,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이것을 질의했어요. 기획예산처장관은 제 얘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다만 부처 간의 관계 때문에 못 하고 있다”…… 이것 푸세요. 제가 보기에선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의 유치원 과정이 이분화되어 있어요. 보육과 교육이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렇습니다.

○김교흥 위원 밥 먹는 거와 밥 먹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함께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선 엄청난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는 아동정책관실이라고 국장급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김교흥 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에는 보육정책국이 있어요. 우리 교육부만 뭐죠? 유아교육지원과가 있어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렇습니다.

○김교흥 위원 이것은 잘못되었어요. 저는 이것을 통합해서 유아정책지원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교육부에. 그리고 시·도 교육청에도 유아정책지원과 만들어야지요. 왜 아이들 교육을 이렇게 내버려 둥니까? 정말 아이들, 아주 6세 정도면 이 세상에 알 것을 알 만한 나이라는 것 아닙니까? 너무 열악한 환경에 너무 지원도 상황 논리에 따라서 지원하는 이런 제도, 이것은 제가 보기에선 교육부총리의 책임이에요. 이것은 통합해서 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시설에 안 다니는 아이들 6%는 내버려둘 것입니까, 그 아이들이 제일 열악한 상황에 있는데? 또 그동안 해 왔던 유아 미술학원 또 어린이집, 이런 곳은 아주 상황이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육과 보육은 함께 묶어야 된다, 우리 아이들 3세부터 5세까지의. 이것을 교육부에서 전담해야 된다, 부처 간의 관계가 있으면 총리실에서 조정해서라도, 대통령 면담을 신청해서라도 이것은 해야지요.

우리가 맨 초·중등 교육만 얘기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4만 2000원씩 아이들한테 예산 지원해서 30몇 억씩 해야 무슨 큰 도움이 있겠습니까? 도움이 있습니까, 몇 개 지역에 그것도 시범적으로 하는 건데? 저는 엄청난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90만 원에서 110만 원 받는데 이 선생님들이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다른 데로 옮길 생각이나 하지? 되겠어요, 이것이? 기본적인 것을 해결하세요. 오히려 선생님들 인건비를 올리세요. 전 그렇게 봅니다. 전 이것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지금 김

교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유아교육이 우리나라 전체 교육 체계에서 좀 사각지대였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공교육 체계 속에 어떻게 반영해서 강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과제고 또 여러 부처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낭비 요소도 있고, 그 가운데 특히 가슴 아픈 것이 아까 6%라고 말씀하셨지만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어린이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로서는 이것을 다른 부처하고 좀 협의해서 영유아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포괄적인 체계를 잡는 것을……

○**김교흥 위원** 로드맵을 빨리 만드세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다른 부처와 논의해서 그것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부처간의 역할 분담을 해서 하려고……

○**김교흥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꾸쳐 제도로 가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경쟁력이 생겨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좌우간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짜면서……

○**김교흥 위원** 같이 좀 짚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하나의 사각지대인데 실업계 고등학교 예산 문제요. 이것을 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을 시켰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렇습니다.

○**김교흥 위원** 그런데 갈수록, 이것이 2006년, 2007년 가면서 예산이 절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4년도 대비해서 2006년도 예산이 인천하고 서울만 100%가 넘거든요. 전북 같은 경우는 2004년도 대비 2006년도 예산이 22%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수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되었어요.

이것을 지방으로 넘기면서 좀 안일하게 우리가 대처하지 않았는가?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성화교육은 누누이 얘기하면서 예산 지원은 삭감되고, 또 우리 실업계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향후 진로에 대해서 정부는 지방에 이양했다고 해서 그대로 놔둬도 되겠는가? 정부에서 생각하는 특단의 실업계 고등학교의 대책, 이것을 좀

잡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지방 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재정 지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특성화고 개념을 도입해서 기업체와 고등학교를 실질적으로 연결시키는 이 사업을 매년 30개 교씩 이렇게 해서 적어도 2010년까지는 200개 학교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지금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교흥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한나라당 경기 부천의 임해규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하셨던 거기 14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아래 “교육예산 부문별 규모” 표의 중간쯤 보면 “평생·직업·국제 교육 부문”에 “인적자원 정책기반 강화”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가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입니다. 그래서 인적자원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제가 이 전체를 보니까 ‘인적자원 정책기반 강화’라 해서 하나의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1871억이고, 전년 대비 한 15억이 늘었지요, 0.8%?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1871억 원의 주요 구성이 무엇인지 혹시 장관께서는 아시나요? 대체로 무엇일 것 같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정책연구 개발과 또 그 정책의 평가, 말하자면 인적자원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 작업비용이 주로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1800억 원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그것일 것 같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임해규 위원** 그러면 55쪽을 한번 열어 보십시오. 답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55쪽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균특)” 해 가지고 있는 것이 1680억 원으로 전년이랑 똑같이 잡혀 있습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예산이 그 예산입니다. 교육

인적자원 기반 조성사업이 1800억인데 그중에 1700억이 전문대학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참 이 것이 통계의 마술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교육인적자원부인데, 교육부 플러스 인적자원부인데 인적자원부에 해당하는 예산이 얼마인가를 다시 그것을 빼고 난 다음에 추정해 봤어요. 왜냐하면 전문대 특성화하는 사업은 고등교육 사업이기도 하고, 예전부터 해 와야 되고 하는 사업이니까요, 교육부일 때도. 인적자원부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사업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따져 보니까 다시 앞쪽으로 와서 보시면 그 예산이 55쪽 그대로 보면 실제 그 예산은 위에 있습니다. 20억 5600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를 위한 예산은 20억 5600만 원이에요. 대한민국 교육예산 전체가 30조쯤 되는데 인적자원부 예산은 20억쯤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좀 거칠고 과하게 표현했는데요. 다시 말하면 아직도 우리 교육부는 절대 교육인적자원부는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항변할 수는 있겠지요. ‘교육인적자원, 인적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모든 시책의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것이고, 교육부는 그런 정책 수립 정도 하고 서로 네트워킹을 잘해서 잘 개발하면 된다’ 이렇게 답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에 20억은 너무 적은 돈인 것 같아요. 한 말씀 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지금 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이 그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을 다시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도록 하겠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문화 특성화 사업이 필요 없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 구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보기에 인적자원부의 사업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아직까지 교육인적자원부로 되었지만 명확치 않다는 것이지요. 스스로가 어떤 부서까지도 만들고 또 교육부가 이렇게 이름도 바꾸고 또 부총리로 격상까지 하고, 이렇게 한 지가 꽤 되었는데 아직도 교육인적자원부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명료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말씀드리는 것이요. 그러한 문제의식은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그냥 지적만 하고 넘어갈 텐데요.

3쪽에 보시면 교육정책 추진 방향이라 해서 4개의 패러그래프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1번이 교육안전망 구축을 통한 사회통합인데 교육안전망 구축 매우 중요하고 사회통합이 교육이 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점을 공감합니다마는 이게 첫 번째 과제인가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게 좀 이상해서 전년도 2006년도 계획안을 받아서 보았더니 거기에는 똑같은 곳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거기에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투자가 가장 먼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의 문서와 올해 똑같은 문서가 서술 순서와 시스템이 약간 바뀌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이것은 왜냐하면 교육부의 교육철학을 의미하고 교육 운영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점과 관련해서도 뭔가 교육인적자원부가 무슨 일을 집중적으로 하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고, 비중을 어떻게 두어야 하는가에 관해서 철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3쪽에 적혀 있는 이런 순서와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그 얘기를, 교육 인적자원과 관련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두 번째 보면 일·학습·삶에 연계하는 평생학습에 관해서 적혀 있고, 세 번째는 인적자원에 대해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적자원이라는 것과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상당히 겹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정책이나 이런 곳에 조금은 더 정교하게 개념 구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말은 좋은 말을 다 늘어놓았으나 실제 예산은, 다시 말하면 그 두 번째 생애주기별 일·학습·삶을 연계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정책 추진 방향의 주요한 하나의 패러그래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비중을 이렇게 두면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표현되어야 하는데 그 예산을 통한 의지 표현은 안 되어 있고 글로만 이렇게, 학문적인 무슨 보고서를 내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이 말과 함께 매치가 되어

야 된다, 저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실제로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부분은 많은 부분이 고등교육 부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대학 항목이 인적자원이라고 하는 거기 들어가 있는 그 구분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바로잡아야 되겠고요.

안전망 구축이 맨 위로 올라간 것은 전체 교육의 인적자원 개발, 수월성 제고 등을 위해서 사실은 소외 계층, 또 교육복지 부문, 그것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역점을 두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몇 가지 사항을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도심지에서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경기도도 외곽 지역이 있고, 그리고 지방도 마찬가지로요. 그럴 경우에 교직원들이 학교와 본인이 거주하는 곳과 출퇴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그곳에서 일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서 요구가 학교 주변에 교직원들이 쓰는 교사들의 기숙사,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기숙사를 건축해 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많이 있었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그런 교직원을 위한, 그전에 사택이라고 했던 그것은 이제 매우 줄어들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새로이 이런 요구들이 상당히 많고 이로 인해서, 교사들의 근무 여건의 핵심 사항이기도 하니깐요, 이런 점이.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곳에 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 요구가 분명한 곳에 대해서는 BTL사업 등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우선은 교육청에서 교사들을 학교에 배치할 때 교사의 주거지를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판단해서 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수한 경우가, 굉장

히 자기 집과 학교가 먼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일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통근 거리가 아주 먼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하면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립 유치원 교사 인건비하고 종일반 운영 지원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단 서로 합의를, 여야 간에는 모든 사립 유치원 교사에 대해 학급담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당시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것을 보아서 작년에는, 그러니까 2006년 예산에는 일부만, 어려운 농·산·어촌 이런 쪽만 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올해부터는 그 전체를 확대해서 하기로 한 바가 있는데 그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게 해서 2007년 예산에도 그것을 계상을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어디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정부 내의 조정 과정에서……

○임해규 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얘기 되었던 것이고, 또 여야가 합의까지 한 사안이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좀더 의지를 가지고 하여튼 이 사태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다시 한번 예산소위에서 논의를 할 테니까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래서 교육부에서 추가로 요구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좀 확인해서 계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거기에는 종일반 운영 지원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것도 검토는 해 보셨나요, 사립 유치원 종일반 운영 지원에 관한 것?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저는 그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학급담임수당이라는 형태로 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종일반 운영 지원에 관한 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일반 지원에 관한 것은 국공립을 포함하는 것이

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를 갔을 때 특히 제주도에서는 제주대학 경우에 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신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호소를 했고 다녀온 많은 위원들께서 공감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때 교육부도 같이 가셨잖아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우리 직원이 같이 모시고 갔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다 보고받으셨나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할 때 시설 공간이 대체로 부족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요구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이번 예산에는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몇몇 대학들이 잔여 사업비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여러 개 공사를 벌이는 게 있는데 지금 제주대학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공사 사업도 마무리가 안 되고 계속 적체되어 있어서 여기에 또 새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해규 위원 일단 검토를 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몇 가지 검토 요망하는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감 때 주로 말씀드렸는데 농·산·어촌에 특성화 학교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제가 보기로는 기숙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환경 개선의 중심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것 이렇게 얘기하면 주로 BTL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이것은 좀 확인하셔서 요청되는

곳은, 제가 알기에는 많습니다. 많은 곳에서 기숙사의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숙학교로 만드는 데 힘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선심성 예산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매년 1년에 한해서 약간의 돈을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어 주는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큰 의미가 없는 사업이라고 보고 이 사업은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등교육평가원 운영도, 작년에도 이게 기관을 만들기 전에 법 통과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도 어쨌든 법 통과를 하고 합의된 이후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립특수교육원 청사 이전 관련해서 작년에도 이게 계속 문제가 되어서 이러저러한 양해하에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러나 이제 연말까지는 그 토지를 강제 매수해서 본격화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했습니다.

이번에 국감 하러 제주대학에 갔다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의 연구실이 학교 안에 있지를 못하고 동네의 민간 건물 3동에 조금 조금씩 빌려 쓰고 있습니다.

부총리, 들으셨어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 말씀 들었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그런데 어떤 건물 가 보니까 밑에 단란주점, 노래방 이런 게 있고 그 2층을 교수실로 쓰고, 어떤 데는 일식집 위에 또 방이 있고 막 나누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도저히 창피해서 못살겠다고 와서 얼마 있다가 또 떠나 버린 겁니다.

교수연구실이 그런 데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委員長 權哲賢 그래서 이런 문제는 너무 처참해서, 우리가 사진을 보기도 하고 가 보기도 했는데 정말 이것은 빨리 해소시켜 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조금 전에 사립유치원 학급담임 수당 같은 게 이번에 다 삭감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 유치원 쪽에서 알면 아마 피눈물 흘릴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대책도 지금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부탁드립니다. 지금 인자법에 교육부 차관을 1명 증원시키는 것을 해 달라고 자꾸만 조르고 있는데 사실 많은 위원들이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무얼 하는지를, 그게 평생교육이라면 또 그것 옳지 않지 않느냐 생각도 하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R&D에 대칭해서 HRD가 필요하다고 운운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들이 공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담당하는 최고 부서의장이 위원들을 찾아다녀서라도 이 부서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왜 필요한지를 한번 더 설득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부분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강조를 시키고 부락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봉주 위원 예산안 편성된 것 보면서 예산문제 다룰 때마다 저희가 늘 자괴감을 많이 느끼는데 사실 정작 중요한 부분들, 그다음에 전년도 하고 대비를 해 봤을 때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편성되면서 정부 내에서 삭감되고 그런 것을 갖고 심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 때문에 좀 곤혹스럽습니다, 매번 예산 심의할 때 보면.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는데 제주대학의 의과대학연구실, 그곳 누가 한번 가 보셨나요? 제주도 국감 갔을 때 현장 한번 방문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직접 갔다 왔거든요. 연구실 현장 보신 분 계세요? 그런 것 교육부에서 국감 때 검사검사 해서 내려가 가지고 확인을 하면 좋은데요.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고등교육 예산에서 신규사업 넣을 수 없다 그러면 지방의 별로 힘없는

국립대학들이 그 얘기 듣고 순진하게 뺏니다, 이 예산. 그런데 서울대학이나 이런 데는 교육부에서 넣지 않고 기획예산처 가서 넣습니다. 그러니까 편성 과정에서부터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국립대 총장님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서울대를 짊고 지방대를 더 넣고 이런 것이 아니고 기회의 균등성이거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넣지 마라 하니까 안 넣고 있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처 가서 넣고,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고……

그런데 제주대 같은 경우는 그 연구실 보게 되면, 연 임대료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연 임대료? 연 임대료가 1억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임대료 1억 날아가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 우수 교수진들이 와서 6개월을 못 버티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저는 제 개인 사무실이 거기 있어도 못 있겠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무슨 노래방, 단란주점 이런 데 2층, 3층, 4층, 그것도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 전체 건축비가 한 170억 정도 되는데 설계비 부분이 7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신규사업 안 된다고 하면서 지난해에도 결국 또 신규사업 몇 군데, 한 두세 대학 정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차관님? 그래서 신규사업 부분이기는 하지만 절실하게 필요하고 특히 지방대학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제주대학은 이번 예산 반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정봉주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신규사업 안 된다고 그러면요, 서울대 만약 신규사업 올라가면 기획예산처에서 또 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육부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좌우간 그 보고를 듣고 우선 제주대학에 그렇게까지 공간이 없을 것 같지가 않은데, 대학들이 보면 단과대학 간에 뭐 간에 다른 데 공간 있어도 또……

○정봉주 위원 제가 그것도 다 파악을 해 보았어요. 단과대학 간 무슨 충돌이나 이기주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지금 총장님이 직선으로 들어오신 분이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데 오죽하면 거기 얻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비단 제주대학뿐만 아니라 이러한 선례가 자꾸만 나오면 안 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좌우간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봉주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향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기본 책무도 못 한 것 같아서 무척 안타까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상황을 다 확실하게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정봉주 위원 지난 국감 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논쟁이 되면서 저는 논쟁에 들어가는 기회비용 이런 것을 따지게 되면 참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평균화정책의 실패, 성공 여부입니다.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국감 때도 제기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07년~2009년까지 3년 정도 하게 되면 중단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자세하게 따진 것은 저희가 서류로 제출할 것이고요. 연간 5억씩 해서 2009년까지 15억 정도 되면, 저는 이렇게 정확하고 근거 있는 연구를 해 놓으면 평균화에 대한 논란이 종식되는 것 자체가, 아마 이게 시쳇말로 남는 사업입니다. 5억 투자해서 한 500억 이상의 가치를 가져오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매년 5억씩 해서 2009년까지 15억, 신규로 이걸 잡아 가지고 평균화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계속 지적을 하셨네요.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법이 16대 국회 말엽에 통과가 되었는데요. 제26조 보게 되면 동법 시행령 제32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 통과된 법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지난해 간신히 교사 인건비 21억 7500만 원, 그래서 매칭 펀드로 해 가지고 한 43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월 11만 원씩

교사 인건비 보조를 했을 경우에 300억 정도 들어갑니다. 320억입니다. 그래서 21억 빼게 되면…… 이것 좀 계산이 잘못되었네요.

그래서 지금 한 300억 정도가 교사 인건비로 추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해에, 아까 존경하는 임해규 위원님이 “여야 합의로 올해 전액 다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지는 않았고요. 지난해 농산어촌 교사 인건비에 대해서만 11만 원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톱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원하려고 노력을 해서 어쨌든 지난해에는,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교육부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확실하게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근거를 갖고 이번에는 전액 다 계상을 해야 되겠다 하게 되면 한 300억 정도가 추가 예산이 편성됩니다. 지난해에도 예산심의소위원회에서 계속 이것 갖고 싸웠는데 이것은 여야 공히 그다음에 유아교육, 저출산 재앙,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적 사업으로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도 있어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정봉주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래서 여하튼 아직도 유아기에 아무런 교육적, 보육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 아동들이 여전히 상존해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그래도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비용 지원, 이것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좌우간 유아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새로 짜서……

○정봉주 위원 새로 짜야 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봉주 위원 그리고 이 문제가 기본보조금 지급과 연동되어서 여가부하고 계속 충돌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여성위원회하고 연석 당정회의에도 참여를 해 보고 그랬는데 거기 논리가 교육부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제가 같이 연석 당정 하면서 거기 가서 설득을 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대 놓고 그런 비판을 할 수 없지만 좀 억지를 부리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차관님도

참석해 보시고 여러 분이 여러 차례 연석 당정을 했지만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논리적 근거를,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안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외국의 사례까지 해서 이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고 국무회의 가셔도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특히 영유아 교육에 대한 T/F팀 정도의 수준으로 전담반을 강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정봉주 위원 그래서 지금 지적하셨던 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 문제, 그다음에 중일반 운영 교사비 지원 문제, 그다음에 만 2세, 3세 어린이 집 다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게 아이들 놓고 지금 부처 간에 쟁투를 벌이는 것 같아요.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여성가족부하고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정부 내에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을 제안해서 좌우간 그것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주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것은 결국 정책적 결단입니다. 그래서 부총리님께서 국무회의나 이런 데 가셔서 세계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자꾸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지금은 이것이 되는 정책이니까 너도 나도 서로 하려고 그러지만 나중에 예산 문제 이런 것 걸려 가지고 잘 안 될 때는 그때 또 서로 떠넘기기 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 희생자는 즉자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고 종국적인 희생자는 국가 전체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렇습니다.

○정봉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회의 가셔서, 그리고 이번 예산 편성할 때 어느 것보다도, 이것 2, 3년 동안 펜딩(pending)되어 온 이슈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중일반을 하라고 해 놓고, 케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중일반 하라고 해 놓고 전

담 인력 인건비 보게 되면 81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운영비 87억, 이것 합하게 되면 한 16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 토털하게 되면 한 460억 정도 되는데요. 이것 희망한국21, 청와대에서도 정책 발표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교육 재앙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까지 와 있기 때문에 영유아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정봉주 위원 예산 필히 편성하셔야 될 것이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좌우간 그 문제에 대한 재구조화와 그리고 부처별 역할 분담 이런 것을 재확인하면서 유아교육을 확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봉주 위원 여야가 공히 한 목소리를 내는 이슈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지금 합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정봉주 위원 이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은 올해 신청이 몇 %인지 알고 계신가요, 2006년도에? 7%입니다, 7%.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정봉주 위원 그다음에 지금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이 과다 계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에 기본보조금 지급하는 것을 인건비 상향조정이라든지 행정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행정적으로 과다하게 개입하는 문제, 이런 등등 때문에 기본보조금 신청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범 실시 기간인데 신청 비율이 적는데 이것을 더 확대시키겠다, 저는 이것 옳지 않은 정책이라고 봐요.

그래서 기본보조금 문제는 또다시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성가족부하고 또 충돌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과다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소위 들어가게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31억 정도를 줄여야 됩니다. 지금 이게 정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세우고 그 정책에 예산을 넣는 것이 아니고 정책을 수립했으니 쫓아와라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현실적용력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이. 불만이 높아요. 정책 수혜자들의 불만이 높으면

실패한 정책이지요? 실패가 예고된 정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1억 정도 과다 계상된 부분을 삭감하셔서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에 예산이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 문제는 정봉주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것의 우열 이런 것을 좀 판단해서 이래 가지고 확실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본보조금은 말씀드린 대로 아주 기본적인 인프라가 없는 유치원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그것은 채워 주자 하는 뜻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얼마만치 다 되면 그다음에는 좀더……

○정봉주 위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시설 간에 이견이 있고, 도농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일 잣대로 재면 안 됩니다. 정책 수혜의 잣대도 경우 경우에 따라서 좀 틀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단일 잣대로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문제 때문에 그 정책 수혜자 내부에서도 또 충돌이 돼요. 자꾸만 사회적 갈등 요소가 된 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시고……

또 하나는 만 5세아 및 저소득층 3세아 유아교육비 지원에서 시설 미이용 아이들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집에 있는 아이들, 그다음에 유치원 미술학원 다니는 아이들…… 이것이 미술학원 문제 때문에 오래전부터…… 그런데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한 25%~30% 정도 됩니다. 이것이 바우처제도로 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부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시설에 지원했을 경우에 바우처제도로 못 가는 것이, 시설에 이것 장난칠 위험성이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바우처제도로 해서 그 시설에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한다면 바우처제도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동시에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미취원 아이들에 대한 대책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방안을 강구하셔야 돼요. 예산에서 이것 계속 빠지거든요, 대상에서도 빠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우선 소외되어 있는 집단부터 유아 교육·보육에 포함시

키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여서 지금 정봉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주 위원 그래서 지금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가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 ‘하겠다. 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흘러온 거거든요. 이번 예산편성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수혜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봉주 위원 소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봉주 위원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여야 간에 정말 같은 목소리를 내고 교육부하고도 합의가 되어 가지고 사립유치원 지원하는 것이 일정 부분 확보되어서 부분적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금년에 그것이 전액 삭감되었지요?

○정봉주 위원 21억 7500만 원 그대로 있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이번에 신청했는데 삭감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사립유치원 쪽에?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委員長 權哲賢 제가 보니까, 작년에 그렇게 열성적으로 해서 반영이 됐는데 이번에 사라진 것이, 역시 교육부장관 부총리의 부재 문제가 장기간 있었던 것이 한 요인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늦게나마 부총리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 문제는 책임을 지시고, 우리도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시 살려내고 해서 사립유치원이 실망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제주대학 건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서울대학을 비롯해서 경북대 부경대 강릉대 경상대 등 14개 대학이 계속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구 사업 예산이 다 올라가 있는데 제주대학 것만 안 해 준다는 것은 균형감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많이 놀라운 것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하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다음에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화면 한번 잠깐 봐 주시지요.

이것이 제임스 헤크먼(James J. Heckman)입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대학자지요. 노동경제학 학자인데 이분이 쓴 유명한 논문이 뭐냐 하면, 교육 단계별 투자효과에 대해서 인적자원 투자 대비 회수비율을 그래프로 그려 놓은 그 양반의 논문입니다, 그 사람 외 몇 명이 같이 한.

쉽게 말씀드리면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투입분의 산출, 소위 인풋분의 아웃풋을 따졌을 때 유아교육에 투자한 돈하고 중학교·고등학교·대학으로 올라갈수록 투자한 돈하고 투자 규모가 같았을 때에 유아 때 한 것이 고등교육기관으로 올라갈수록 투자한 것보다 효과 면에서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학적으로 유아 때에 두뇌 발달이 많기 때문에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를 조금만 늘려도 국가 전체 경쟁력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효과가 난다고 소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유아교육 예산이 지금 GDP 대비 0.2%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이군현 위원 교육부 예산 대비하면 0.7%, 이렇게 지금 자료를 주셨어요. GDP 대비는 제가 알고 있었고, 교육부 예산 대비는 지금 교육부에서 주신 자료로 0.7%인데……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아교육 예산 자체를 예산편성 할 때 비율을 좀 증액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마인드를 우리가 그렇게 가져야 한다, 대학은 사실 교수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R&D 예산이다 누리사업이다 뭐다 해 가지고 각종 예산이 사실 고등교육 쪽에는 투자가 되지만 유치원이나 유아교육 쪽에는 그렇게 목소리를 내서 강력하게 교수들만큼 자기 몫을 찾아 먹지 못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유아교육에 대한 예산 자체를 정책적으로 배려하지 않으면 유아교육 예산이 늘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아교육 예산을 전체적으로 좀 늘려야 한다, 지금 매년 유아교육 예산이 증가됐다고 하지만 실제 거의가 만 5세아 무상교육 비입니다. 이것 빼면 실제 유아교육 쪽에 예산 증가된 것이 아주 미미한 양입니다. 장관님도 아마 파악을 하셨을 텐데……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것 첫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유아교육과 관련해서 김교홍 위원님도 아까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던데, 유아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전체 예산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고,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이 앞에서 지적했는데, 작년에 제가 한나라당 간사를 하고 또 여당의 정봉주 위원이 간사를 해 가지고 양당이 합의한 것이 뭐였느냐 하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였습니다. 양당 간사가 어렵게 어렵게 합의를 해 가지고 했는데, 이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곧 예산 검토를 초등·중등·고등·평생교육 나누어서 부문별로 예산심의를 할 텐데, 그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반영할 겁니다. 교육부에서도 이것이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하고 유·초 예산으로 늘 붙어서 나오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유치원과 초등학교 예산을 분리해서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 실제로 얼마나 증액되는가 이런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단설 유치원 연도별 설립계획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들을 죽 보면 “점차 확대해 가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 장관이 바뀌고 벌써 다섯 번째 아십니까? 하면서 연계성을 갖지 못해 가지고 또 새로 들어온 분에게 말씀드리면 그때부터 “예,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교육부에서 문건화되어서 연도별로 몇 개씩 단설 유치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 계획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알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다음에 아까 종일반 이야기 나

왔는데, 종일반 운영 지원 예산 이것도 이번에 꼭 편성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아교육과 관련해서 마지막 말씀은, 아까 김교홍 위원님 굉장히 돈을 높여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지금 유아교육에 대한 체계가 크게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유치원은 교육부에 있고 영유아는 보건복지부에 있다가 여성부로 감으로 해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육의 효과성하고, 그다음에 정책 집행의 효과성 측면에서 어떻게 이것을 체계화시킬 것인지 검토를 해서 그 안을 교육부가 국회에서 한번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알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이상 유아교육·유치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큰 덩어리가 여러 개 되는데 두 번째 덩어리는, 지금 조리사 직무규정 시행령을 만들고 있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이군현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확정 이?

입법예고 내 가지고 지금 의견을 듣고……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안을 만 들어서 입법예고가 끝난 상태입니다.

○이군현 위원 입법예고 끝난 상태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이군현 위원 그런데 저는 거기 조리사의 역할, 업무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정쩡해요. 명칭은 집어넣어 놓고 영양사와 조리사의 역할·업무가 뭐가 다른지,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지금 교육부의 입장은 ‘예산 문제 때문에 그것 넣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저는 예산 문제하고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 문제는 지금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할 때 한쪽에서 개정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영양교사와 조리사와의 직무가 서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군현 위원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명확히 쪼개 줄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자꾸 교육부에서 입장이 양쪽에…… 그러니까 ‘당신네들 책임은 이것이고 권한은 이것이다, 역할이 이것

이다’ 하고 분명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한 그 법안의 내용에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조리사들은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조리사의 직무규정이 들어가 있습니까, 시행령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지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차관님이 아시면 차관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직이어서 업무분장이 분명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기능직이라고 명시 안 되고, 그것은 저는 로직(logic)이 옳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 명칭이, 직위가 들어갔으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로서는 명확하게 규정화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너희는 이리이러한 권한을 갖지 말라든지, 너희는 이리이러한 책임이 있다라든지, 자기네의 역할과 권한·책임이 뭐냐 이것이지요.

저는 분명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일반적으로 조리사 그러면 기능직 조리사에 대한…… 있는데, 학교 안에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렇게 해 줘야지요. 아무 책임을 말지 말라든지 너희는 이런 일만 하라든지, 아니면 이만큼 일을 하라든지, 그것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불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입장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이유가 뭐니까? 어려움이 뭐니까? 기능직이라고 해서 그 직무를 나누지 않는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기능직의 경우는 위원님 아시는 대로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우리가 기능직으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이군현 위원 학교에서 급식 사고가 났을 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아닙니다. 이를테면 벽돌공 그러면 그것을 세밀화하지

않고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군현 위원** 아니, 그렇지 않지요. 벽돌공하고 다르지요. 벽돌공이야 집 짓는 사람이 책임 맡아서 ‘벽돌 가져와라, 벽돌 쌓아라’ 하지만, ‘너, 벽돌공은 뭐다’ 할 필요가 없지만, 학교에서는 급식 업무가 애들 건강과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의 책임이 뭐냐 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받고 싶다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 얘기가 그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래서 우선 교장의 감독하에 있고요.

○**이군현 위원** 아니지요. 교장의 감독이야……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다음에 조리사의 업무는 영양교사와의 관계에서 그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아닙니다. 지금 장관님이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영양사는 영양사대로 존경하고 그분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것이 사고가 났을 때 분명히 책임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볼 때에는. 조리사는 당신네들의 역할이 뭐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답변보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는 것으로 일단 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했는데, 제주대 문제입니다. 저도 그 사진을 전부 다 봤고 자료도 저도 여기 잔뜩 받았습시다. 장관님도 보셨을 텐데, 의학전문대학원 신축 설계비, 저는 그렇게 룬살롱 위에, 노래방 위에…… 교육기관을 그렇게 해 가지고 수업해서는 저는 분명히 안 된다고 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교육부에서 틀을 짰지만 또 국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가 협의 조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신규사업은 무조건 안 된다 아마 그런 원칙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예산이 그렇게 경직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신규사업이라 하더라도 우선 순위가 있고 불요불급한 것을 따져서 ‘이것은 신규사업이지만 먼저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지, 신규사업이니까 모든 것의 신규사업은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신규사업이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과연 그 기준을 지켰습니까? 다 따져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작년

에도, 제가 특정 대학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 신규사업이지만 들어간 대학도 있고 빠진 대학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판단하시고 저희도 판단해 볼 때 지금 제주대학 문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애들 교육하는 곳이 쪼가리 쪼가리 해 가지고, 그리고 교육 장소로서 적절치 않은 그런 방들을 빌려 가지고 교육시설로 쓰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짚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검토 좀 해야 된다고……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저도 위원님처럼 어떻게 해서 교수연구실을 노래방 옆에다 놓고 하는지 의아하기도, 참 개탄스럽기도 합니다.

다만 제주대학은 지금 그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이 그들이 진행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넘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운 사업을 또 무엇을 준다고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좌우간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공간이 없고, 또 꼭 노래방 옆이 아니면 정말로 어디 빌릴 공간이 그렇게 없는 곳인지 상황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런데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 시설이 적절치 않아서 지어 줘야 한다는 면도 있지만, 지금 제주도라는 곳이 실제로 여러 가지 면에서 소외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도의 의대 교수들 진출률이 제일 많은 것 아닙니까? 그것 사실이지요? 의대 교수들 다른 데로 진출하는 율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전국 의대 교수 중에서?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이렇게 말씀드리면 뭣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계속 밖으로 진출을 많이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물론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많이 나오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에 의대 좀 반듯한 것을 지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저희도 국회에서 여야가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학 구조개혁 지원사업, 이것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적에는 성과평가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시작한 됐는데, 지금 공주대 문제만 해도 간판 문

제, 대학 제목 거는 것 가지고 천안, 된다 안 된다, 공주 동문회에서 된다 안 된다, 지금 복잡하잖아요? 창원대학도 그래요. 본부를 어디다 두느냐의 문제, 전국의 대학들이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 것보다는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면 재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이 기준을 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시간 때문에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세세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교총하고 학급담임수당 올려 주는 것 단계교섭 하셨나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런데 매년 학급담임수당 조금씩…… 그 사람들은 10만 원씩 이렇게 올려 달라고 하지만 실제 보면 1만 원, 2만 원 이렇게 올려 주고 있는데, 지금 담임들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임수당 인상에 대해서 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예산 규모에 맞추어서 금액은 정해야 되겠지만 입장 듣고 제가 나머지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이것은 예산 관장하는 관계부처와 내용을 협의해서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제가 교육부장관의 입장이 어떠신가 듣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겠다든지, 그것은 옳지 않다 해서……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교육부로서야 교육부 일하는 모든 분들의 봉급을 올려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역시 중앙인사위원회가 전체 공무원들의 봉급과 보수를 다 관장하기 때문에 그곳과 저희들이 협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군현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했습니다.

부총리께서, 여러 위원들이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나오니까 답변하기가 조금 짜증이 나시는 것 같은데……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죄송합니다.

○委員長 權哲賢 목소리에 조금 짜증이 섞이기 시작하시네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죄송합니다.

○委員長 權哲賢 조금 분위기를 바꾸시고…… 자주 지적하시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건가 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민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두 위원 9월 15일 고려대 문과대 교수가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선언을 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민병두 위원 그리고 이어서 9월 26일 전국 80여 개의 인문대 학장들이 성명을 발표했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민병두 위원 교육부가 인문학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어떤 노력을 했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래서 10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많이 늘렸다고 말씀드리기도 좀 송구스럽습니다.

○민병두 위원 100억 증액은 교육부 내년 예산 3조 6600억 원의 0.03%, 예산 증가액 2조 1200억 원의 0.47%에 불과합니다. 80여 개 대학 인문대 학장들이 공동으로 이런 인문학의 위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학진 주최로 인문학주간도 하고 이런 것에 비해서는 너무나 미미한 것 같아요. 그만큼 현장에서의 어떤 위기의식에 대해서 부총리가 생각하는 위기의식에 좀 괴리가 있는 것 아닌가 싶네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위기의식을 안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에 전체적으로 학문 연구비가 부족해서 그것 전체를 늘렸고, 아무래도 그것이 이과·공과 쪽에 많이 집중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인문학에 대한 위기론이 더욱 강화되면서 이에 대한 정책 관심도 좀 늘어났습니다마는, 우선 이번 예산에는 그것 충분히 반영 못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병두 위원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인문학이 시장과 만나는 지점이 한류 문화, 한류 상품이라고 한다면 인문학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 사료와 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외환위기 때 215명이던 인

원을 144명으로 감축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지금 현재 정규직은 139명에 불과합니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 해외 한국학 연구지원, 각종 연구 등 인문학의 토대를 다지는 사업을 80여 명의 비정규직 연구원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정규직 전환이랄지 예산 반영에 대한 부총리의 특별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래서 '07년 예산에 교수 2명, 그다음에 연구원 1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민병두 위원 그런데 한류가 이대로 가면 5년 못 간다 하는 보고서를 제가 작년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문광위 시절에 3개국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소회를 보고서로 정리한 것인데, 사실 '겨울연가'랄지 '대장금'이랄지 이런 것들의 약효가 지금 현재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계속 스토리뱅크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다시 한류 문화, 한류 상품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홍콩류'가 1980년대 한 5~7년 갔지요, 아시아에서? 그다음에 90년대의 '일류', 일본문화 유행이 한 5~7년 갔지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니 결국 한류가 그것을 대체한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밑바닥에서의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스토리뱅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료와 고전에 대해서 연구를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국가전략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단군 이래 5000년 동안 대중문화가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호평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얻는 부수효과가 굉장히 큰데 그렇다고 한다면 전략적 관점에서 이 문제에 관한 투자를 하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족문화추진회는 세계기록유산인 승정원일기, 국보인 일성록 등을 한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2006년 예산은 50책, 26억 원이었으나 2007년 예산은 40책, 22억 6200만 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아직도 국역해야 할 사료가 4800여 책이 남아 있는데 한문으로 된 사료를 한글로 번역하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한데 이런 전문인력들을 양산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계속 내보

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총리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구요.

지금 대학 병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원자재료 결제 기간을 일반 시장에서처럼 단축한다고 한다면 수익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시뮬레이션한 결과도 보여 드린 적이 있어요.

경상대학교가 한 달로 제일 짧습니다. 다른 대학교 병원들은 한 두 달에서 7, 8개월 이렇게 됩니다. 요즘 편의점, 이마트, 이런 데도 보면 결제 기간이 3~5일이거든요. 그만큼 재고 관리를 잘 하고, 유통 관리를 잘해 가지고 그만큼 비용을 절약한다는 것입니다. 경상대학 병원 같은 경우가 그만큼 짧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 병원에도 적극적으로 권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 동의하셨는데 아직 병원들이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있지 않네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부총리께서 확실한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라구요.

아까 정문헌 위원이 강원대학병원 문제를 말씀하셨고, 또 정봉주 위원이나 이군현 위원이나 또 위원장님이 제주대학병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강원대학병원 문제는 교육부가 이미 확약을 한 거였다는 말이지요, 99년도에. 교육부 제정 81470-371, 99년 5월 20일 지방공사 춘천의료원을 인수하여 1개 병동 증축과 인수 건물 개보수를 통하여 400병상 규모의 병원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계획, 이행을 해야지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여러 분들이 질의하셨으니까 증언부언 안 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 사진 다 보셨으니까…… 사진 보셨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설명 들었습니다.

○민병두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진을 보여 드릴 수 있어요.

레이더헬스, 키성장센터, 무슨 보신탕…… 이런 데 사진인데 만약 교육부에 여러 과들이 이렇게 보신탕협회가 있고, 노래방협회가 있고 이러면 방치하겠습니까?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고민해 보시기 바라구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알겠습니다.

○민병두 위원 대개 많은 국립대학들이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건물 신축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리모델링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2005년도에 설계비가 1억 14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네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는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 신축하는 것보다는 리모델링하게 되면 비용이 3분의 1 정도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자기들이 직접 설계도 하고 이러면서 비용을 아끼고 있습니다. 아주 비상 보수 상황이 아니면 보수도 하지 않으면서 리모델링하기 위한 비용을 모아 가고 있어요. 총 230, 40억 정도 드는 사업인데 실제로 아까 제주대학 의대 같은 경우는 분산되어 있고 그래서 문제이지만 서울대학 같은 경우에 더 심각한 것이 3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사진을 보면 LNG가스관 같은 것이 교실, 복도, 실험실 근처에 막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안전상에 상당한 위험이 있네요, 소방안전 공간도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전력선을 무단 증설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온·고온 시설 및 배양시설이 복도에 배치되어서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리모델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이지요, 자기들이 비용을 줄여서, 2분의 1, 3분의 1 정도로 줄여 가지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선도사업의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대개의 경우 다 신축하겠다고 이래 가지고 다 부시고 이러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첫 해에 1억 얼마의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작년부터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BK21 2단계 연구동도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에 맞추어서 순차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배정 안 됐고, 내년에도 예산이 배정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는 선도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민병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서울대 자체 내에서 예산안에 자기들 스스로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민병두 위원 기성희비라든지……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서울대학 내에서 논의 끝에 그것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기

로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병두 위원 서울대학 내에서 자연과학대학도 있고, 이공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 대학이 있으니까 서로 논란의 소지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경우, 그다음에 선도사업의 의미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국정감사 때 경북교육청, 충남교육청이랄지 이런 데서 초·중등 교장, 교감,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원, 연구사, 유치원장, 원감, 보건교사, 상담교사 등에 대해서 교육청이 성과급을 책정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무조건경력 순으로 성과급 나눠 먹기 한 사례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것은 장기근속수당을 부당 전용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행정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구요.

마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순영입니다.

저는 먼저 증액할 부분부터 묻겠습니다.

계속 본 위원이 학자금 용자에 대해서 국감 때도 질의를 했고, 또 계속 지금도 학교에서 용자금 때문에 학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기획예산처에 소득분위 3분위 이하 10만 명에게 2% 이자차액 보전 예산 93억 원을 요청했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런데 반려가 됐군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래서 교육부도 이에 대한 필요한 인식이 이미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소득분위 4분위 이하로 해서 20만 명에게 정부가 한 3% 이자차액 보전을 좀더 높여서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다음에 많은 위원들이 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에 사실 인건비 지원을 하게 된 것이 한나라당 의원과 열린우리당 의원이 행사에 가서 약속을 해서 즉흥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계속 예산 심의에서도 굉장히 토론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중요한 것은 아이한테 지원이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 원비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교사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는, 물론 해야 되겠지요, 유치원도 다 여차피 이제 앞으로 의무교육으로 가야 되고 이런다면.

그렇지만 지금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는 저소득층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가 저는 우선순위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예산 심의 때 계속 그 문제를 지적했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법정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 자녀에게 사실 유치원 종일반 다닐 때의 급식비를 포함해서 비용을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여성가족부에서도 아동 지원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아이한테 지원이 갈 것이냐에 대해서 원칙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형평성도 봐야 되고, 그리고 국가는 무엇보다도 저소득층을 우선 복지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 소요액을 차상위 계층까지 했을 때 1226억 원 정도로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참에 계속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고 이러니까 근본적으로 한번 짚어 봐서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아이한테 혜택이 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유아기 교육이 아직 체계화 안 되어 있어서 전혀 취원하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는 어린이들이 아직도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우선 기본적인 육아와 유치원 교육 기회를 위한 시설과 이것을 만드는 것이 우선 제일 급선무라고 보고요. 그러면서 역시 총체적으로 영유아기의 교육을 다시 재구조화되고, 부처 간의 역할도 분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내년에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제안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무조건 처음부터 다 돈이 되면, 예산이 되면 하면 좋겠지만 지금 그것이 안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법정 저소득층하고 차상위 계층 자녀들에게 우선순위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일차적으로.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노력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다음에 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국립대학교 시간강사 연구보조비를 제출된 예산보다 2배로 상향 조정하여서 연구보조비를 시간당 1만 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1인당 월 10만 원의 강사료 인상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 봤자 얼마되지 않는지요.

작년에 2006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도 이 내용이 교육위에서 증액 의결되었지만 사실 예결위에서 다시 또 삭감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강사에 대해서는 제가 구차하게 얘기 안 해도 장관께서도 너무 잘 아실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최대한 우리가 생활이 되도록은 지원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올해는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어떻게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간강사 문제는 우리 대학 교육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부가 전부 할 수는 없고, 역시 강사료는 대학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성회비 등을 통해서요. 그러나 그 부족한 부분을 좀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하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학으로 하여금 시간강사의 기본 베이스를 더 늘리도록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더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1만 원으

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연구비를 이렇게 했던 것을 뽑았을 때 한 76억 정도를 증액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저희들이 계산까지 다 사실 뽑아 봤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현재 시간당 5000원씩 연구비라는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대학수능 수수료 및 전형료 지원을 하는 것이 좀 어떨까요? 이것을 본 위원이 계속 그동안에 몇 번 정책으로 제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능 수수료 무상화, 대학 입학 전형료 무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일단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해서…… 돈이 없어서 시험 못 볼 수는 없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즘 거의 다 대학을 가고 그러는데 굉장히 했을 때 큰돈이기 때문에, 없는 집일 경우에는, 그래서 저소득층 우선으로 이것을 좀 지원할 의향은……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저소득층 자녀, 또 특수교육 대상자의 대학 수학능력 시험 응시료를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교육평가원이 아주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대학입시의 전형료는 대학별로 그것을 결정해서 하고 그 비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가 대학을 보고 어느 부분을 무료로 하라 마라 할 일이 아니어서, 그러나 저소득층과 이런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그런 지원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대학에 알려 주어서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다음에 학교 비정규직 여건 개선과 직무연수 실시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본 위원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실효를 거두고, 또 교육부의 학교 비정규직이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이에 수반되는 재정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정부도 지난 8월에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안 되겠지요? 지난번 국감 때도 제가 서울시교육청에 가서 문제 있었던

것을 지적했던 바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은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부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또 비정규직 관련 법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는데 가능한 부분은 초·중등학교 회계로 봉급을 주는 그런 직원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의 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최순영 위원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연수가 지금 없는데요, 이에 대한 예산을 우선은 교육부가 편성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조리사, 조리 종사원에 대한 직무 연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예산에 전연 잡혀 있지도 않고 지금 전연 직무 연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고용보험기금이 있고, 또 능력개발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도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특별교부금을 활용해서 학교 내의 비정규직에 대한 재교육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다음에 학급 급식 지원 확대입니다.

학교급식법을 집행하는 책임부처로서 교육부는 2006년 특별교부금을 학교급식 직영 전환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도 직영 전환 학교 지원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전국 한 100여 개 학교의 직영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연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제안하고요.

또 하나는 지자체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하도록 이번에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최순영 위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시작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적극 독려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됩니다, 지금 전연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이 예산도 그렇겠지만 아직까지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에 지원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초·중등학교의 급식시설비는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책임지고 시행을 하기 때문에 급식센터는 반드시 다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몇 개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모든 곳에 다 설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교육청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대학생들의 학습에 필요한 교구·교재 지원에 대해서 대학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이번에 이것이 장애인 도우미 사업하고 말하자면 교환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교구·교재 지원을 해 오다가 이번에는 그것이 빠지고 그 대신에 학생 도우미 사업을 강화했는데 물론 전체로 보면 장애인 교육을 위한 예산을 늘렸지만 이번에 교구 교재 지원이 빠진 것은 학교들이 나머지는 보충을 해서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권장하려고 합니다.

○최순영 위원 그리고 또한 장애 성인 야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또 이를 교육부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올해 확대 편성한 특수교육보조원 지원에 관련해서 40% 지원을, 타 복지예산을 보면 50% 비율로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50%로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이것도 앞으로 늘려 가야 될 분야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교육이 아무래도 청소년 교육에 집중이 되었다가 성인 장애인 교육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가 되어서 아직 그동안은 정책적인 관심을 못 받

았는데 지금 이에 대한 어떤 지원 근거를 만드는 것이 우선 과제여서 법적 근거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성인 장애인 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2시 반에 속개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여러분들이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20분 후인 5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委員長 權哲賢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앉아 계신 이 자리의 분위기가 저는 좋게 느껴집니다, 하루 종일.

그 이유는, 제일 첫 번째 앉아 계시는 특수교육원 원장님, 여성 분이 앞자리에 딱 앉아 계시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잠시만요, 그러면 기왕 그렇게 지적하신 것, 이번에 며칠 전에,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수교육원 원장으로 새로 발탁된 이효자 원장 인사하시지요.

○국립특수교육원장 이효자 11월 14일 발령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리 특수교육원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哲賢 앉으십시오.

시작하십시오.

○안민석 위원 그래도 저희 상임위 여야 위원님들이 여성들의 비율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는데, 그 결과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은 그렇게 연결을 짓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어촌 우수고교 육성사업이라는 것이 있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안민석 위원** 2007년도에도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73억 원 증액돼서 43.5% 증가했고, 2007년도에 240억 정도가 지금 책정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21개 학교에 국고에서 8억 원씩 지원했는데 이것은 학교 단위 지원 내역으로 보면 아주 굉장히 대단한 액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워낙 농어촌 우수고 육성이라는 취지가 교육 때문에 농어촌을 떠나니까, 또 교육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유 때문에 농어촌을 떠나니까 농어촌 지역에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떠나는 인구들을 막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교육 때문에 오히려 농어촌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런데 몇 년 시행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농어촌 우수고교로 지정받은 학교들이 취지에 맞게끔 잘 되고 있는지를 한번 평가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어촌 우수학교 취지가 떠나는 학생들을 붙여 두자는 취지라고 그러면, 농어촌 학교로 지정되어서 예산 지원을 받게 되었고, 그렇다면 그 학교가 더 좋은 학교로 되었고, 따라서 그 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들면 이 사업의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줄지 않거나 줄어도 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덜 줄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안민석 위원** 예년보다는 줄어드는 폭이 좀 적어야 되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런데 효과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들어요.

국정감사 할 때 자료들을 죽 제출받아 봤는데 2004년부터 지원받은 학교가 7개 학교, 2005년에 지정된 학교도 7개 학교, 그런데 이들 학교를 비교해 보니까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학교들이 꽤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우수고 지원에 대해 아직 면밀한 평가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부총리님도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이제 1년 조금 더 된 사업이어서 아직 본격적인 평가는 이르다고 보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랄지 학생의 만족도랄지 이런 것들은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아직 초기 단계인데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가타부타 평가를 한다, 예단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예산을 확대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의 성과를 좀더 면밀히 지켜보고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년 정도에는 이 사업을 초기 단계 평가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리고 농어촌 우수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이 예산이 나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근본적인 취지가 떠나는 인구, 떠나는 학생들을 묶어 두자는 취지, 오히려 또 불러들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굳이 우수고 사업을 농어촌 학교에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에 인구 20만 정도 이하…… 10만 정도도 시로 있는 도시들이 꽤 많거든요, 5만 이상이면 시가 되니까요. 그래서 인구 한 20만 정도 이하의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교육 때문에 인근에 있는 대도시로 많이 가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농어촌 우수고 사업을 올해 정도에는 도농복합도시에도 한번 확산을 시켜 봐서, 큰 범위는 아니더라도 인근의 큰 대도시에 둘러싸여 있는, 또 대도시에 가까운 도농복합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교육 때문에 많이 빠져나가는 도시를 전국에서 2, 3개 선정해서 그렇게 우수고를 점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좀 평가가 좀 이르지만 계속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효과가 있으면 이것을 가능한 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대시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교육위원들 몇 분이, 옆에 계시는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하고 김영춘 위원님하고 본 위원하고 경남 거창군에 있는 거창고등학교라는 곳에 갔습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가 보고 싶었던 학교고 인성교

육을 잘 시키고 있다고 명성이 있는 학교라서 저희들이 정말 시골 골짜기까지 일부러 찾아서 갔는데, 참 들었던 대로 우리가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거창고등학교 그 모델이 우리 한국 교육의 희망과 등불이 되기를 바라고 거기를 거쳐간 학생들이나 거기 가르치는 교사 분들이 한국 교육의 민들레 홀씨가 되어서 한국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를 저희는 염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저희들은 우수 학교라고 눈으로 봤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가슴 아픈 것을 한 가지 봤어요. 여학생들이 기숙을 하는데 기숙사 한 방에 10명이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좋은 학교는 아주 우수한 시설은 아니더라도 평균치의 시설은 그래도 특단의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학생들도 훌륭하고 선생님들도 훌륭하신데 그런 학교는 교육부 차원에서 부총리님께서 다른 이유를 다 차치하고라도 제대로 한번 키워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자랑할 수 있는 학교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숙사에서 한 방에, 그 조그만 방에 거의 칼잠을 잔다고 해도 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이 10명이 좁은 방에서 자면서 저희들에게 아주 해맑은 표정으로 “기숙사 좀 지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총리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위원님들께서 바쁜 국정 속에도 그렇게 멀리까지 직접 학교를 방문하시고 여러 가지를 보시고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감격했습니다.

거창고등학교랄지 대건고등학교랄지 우리 국내에 그렇게 자발적으로 노력해서 좋은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이 참 기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교육부 계획은 전국의 모든 학교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개방형자율고도 그런 뜻에서 한번 특별한 학교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별 학교에 필요한 사업이 있고 한데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어느 특정 학교라고 그래서 당장

재정 지원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그러나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특단의 관심과 특단의 지원을 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장애아 교육 지원사업 관련해서, 각 특수학교에 보면 특수교육보조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변 해결이 어려운 아이들을 보조교사가 화장실 갈 때 도와주고 용변 처리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많이 하는데요. 이 보조원 숫자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도 보통 한 반에 1명 정도는 배치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가령 40개 반이 있으면 40명 정도의 보조교사가 필요한데 보통 10명 정도, 많아야 절반 정도 학급에 해당되는 보조교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관련된 예산이 책정됐지만…… 그런데 2007년에 4000명이 필요하다는 교육부의 근거인데 실제로 전문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4000명이 아니라 전국에 지금 2만 명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되는데, 일단 올해는 내년 예산이 이루어졌으니까 차기 연도 예산 편성 하실 때는 특수교육보조원의 정확한 필요한 수요가 몇 명인지 그것을 객관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당장에 2만 명 다 채우지는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 방안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다음에 국가 위탁 학자금 대여 관련해서요, 이것이 2006년 대비 16.6%로 감소되었거든요. 그리고 이것 대상자들은 주로 서민의 자녀라고 봅니다. 이렇게 16.6%나 감소되었는데 사업 집행에 차질은 없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큰 차질이 있다고까지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 못 한 것 같은데, 서법석 이사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어떻게 차질이 없습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서법석 국고 학자금 대여를,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자녀들의 학자금 대부를 저희들이 대행해 주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당초 예산이 836억이었는데 저희

들이 부족해서 기금 변경을 해서 902억 원 확보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한 920억을 요구했었는데 현재 확보된 금액이 75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200억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안 되면 기금 운영 변경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로서는 이번 예산심의 때도 같이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민석 위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좀더 챙겨보겠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서범석** 감사합니다.

○**안민석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국감 하면서, 그리고 여타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TOEIC, TOEFL 시험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또 로열티만 하더라도 1년에 400억, 그리고 지난 2006년 한 해만 하더라도 약 180만 명이 봐서 TOEIC, TOEFL 응시율이 세계 1위에 이르고 있는데 반면에 중국에서는 CET라는 자체 영어 능력 시험, 수준별 진단 시험을 개발해 가지고 실시해 오고 있고, 일본은 STEP이라는 자체 영어 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토종 TOEIC, 토종 TOEFL 시험을 정부에서 개발해야 된다 그런 요지의 주장을 제가 죽 했었는데요. 그런데 내년 교육부의 영어 능력 인정 시험 관련된 예산 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담당 부서에 알아보니까 2007년 특교에 반영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정도의 의지 가지고는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런 사업은 국고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금년에 이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좀 늦어져서 정식 예산에 반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교로 우선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정상적인 국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안민석 위원** 마지막 질의 드리겠는데 한 30초 정도만 더 쓰겠습니다.

정확하게 2년 전 이맘때 문광부하고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청소년 체력 실태조사를 했고 그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여

러 번 말씀드렸지만 10대 청소년들의 체력이 40대 아저씨보다도 낮고, 한·중·일 청소년 체력을 비교했더니 한국이 가장 떨어진다는 조사를 발표했는데 그 발표 난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정부적인 대책이 전무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11월 15일, 불과 한 1주일 전에, 고등학생들의 집단 결핵 감염 정도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배길한 결핵연구원장의 말씀에 의하면 이러한 결핵 증가의 주 원인이 학생들의 학업에 의한 스트레스, 다이어트, 영양 불균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관리 문제를 정부가 소홀히 한 것과 무관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엘리트 학생 운동선수들을 위해 가지고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지출되는지 혹시 부총리님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제가 정확한 액수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약 113억 원입니다. 이것이 학교 운동부 육성, 소년체전 출전비, 소년체전 훈련비 등등 해서…… 물론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 예산 아닙니까.

어쨌거나 엘리트운동선수들을 위해 가지고 1년에 113억 원이 지출되고 있는데요, 일반 학생들을 위한 스포츠활동 예산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교육부의?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교과별로 무슨 예산을 따로 이렇게 해 놓지는 않아서……

○**안민석 위원** 교과 예산이 아닙니까.

가령 학생들도 엘리트 체육이 있고 생활 체육이 있겠지요. 생활체육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위한 예산은 전무합니다. 제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었던 방과 후 동아리 활동을 교육감배 대회로 내년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교육부 예산으로 각 16개 시·도에 1억 원씩 학교 스포츠클럽 시·도 대회를 하는 것을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 봤자 16억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체력 문제가 국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더 이상 방치할 게 아니라 저는 부총리님이 대통령께 대통령 산하에 청소년체력 향상위원회 이런 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주문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적어도 부총리 산하의 직속기구로 청소년체력향상위원회를 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청소년 체력 저하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또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그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물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체육을 강화하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의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교육부 산하에 또는 정부 산하에 그런 위원회를 두고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먼저 저출산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부 예산 개요를 검토해 보니까 2007년 양극화 해소 및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예산 중에서 공통 분야를 뺀 저출산·고령화 분야 예산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사이버가정학습체제 구축, 입학아 무상 교육비 지원, 학교폭력 예방책의 구축 내실화, 학교 잔디운동장 확대, 또 해외 우수인력 유치, 외국인유학생 유치 이런 것들이 저출산·고령화 예산에 잡힌 거예요.

부총리님, 사이버가정학습체제 구축을 하게 되면 출산율이 높아집니까? 또 학교 잔디운동장 확대하면 출산율이 높아집니까?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아무리 해 봐도 별로 연관성이 없는 것 같지요?

저는 이렇게 된 것은 기존에 있던 사업 중에서 그냥 저출산에 끼워 맞추기를 한 거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출산 관련 예산하고 학교 잔디운동장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하면 출산율이 높아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은 교육부가 저출산에 대한 고민을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출산

이 왜 발생했는가?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요새 사회활동으로 출산과 육아를 감당하기가 어렵고, 또 아이를 낳고 나면 육아와 교육을 위한 비용이 많이 들고……

○**이경숙 위원** 그런 원인을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러한 원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 저출산 문제가 세계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한데 교육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큰 고민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교육부에서 해야 될 일이 교육 분야에서 저출산 원인이 뭔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연구작업과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우선 예산 항목 구분에 있어서 무리하게 관계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것들도 여기에 이렇게 분류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경숙 위원** 저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지금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우리 공무원과 또 직원들이 저출산 문제로 뭘 고민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실태조사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태조사하는 데 그렇게 돈이 안 들거든요. 그러한 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인데 그런 것들은 아예 있지도 않고 이렇게 엉뚱한 사업들을 넣은 것은 참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본질적인 그런 실태조사나 연구작업을 좀 해 볼 계획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다시 따져 보고 정책도 세우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접근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구학적 접근을 해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앞서야 될 데가 저는 교육부하고 여성가족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부가 이렇게 인식이 낮으면 우리나라의 저출

산 문제는 해결할 길이 상당히 요원하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주 근본적인 연구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치원을 많이 만든다든가, 아니면 보육시설에 가는 어린이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국공립 대학에 그런 보육시설을 만든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차원에서 저출산과 가장 관련되어 있는 것이 유아교육 지원사업이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앞서도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유아교육법이 2004년도에 제정되고 나서 시행 3년이 되어 감에도 공립과 사립 간의 격차가 엄청 납니다. 이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육부 차원에서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래서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영유아기 교육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재구조화와 정책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의 이런 차이를 줄여 나가는 근본적인 문제와 함께 적어도 작년에 약속했던 것은 실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사립유치원 교사들에게 담임수당 11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에서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것을 안 지켜 가지고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교육위원회에 있지 않았지만 제가 여성가족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야지 유치원 교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잘 돌보지요. 약속도 안 지키는데 이게 잘 되겠습니까? 이것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개정안을 내는 데 좀 동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전반적인 유치원 교육을 다시 우리가, 영유아기에 그것을 다 해야 되는데, 다만 현재 있는 상태에서 사립과 공립유치원의 문제, 또 교사들의 보조급 문제 이것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경숙 위원 본질적인 것은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적어도 아주 기본적인 것, 그리고 작년에 약속했던 것은 실시를 해야지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게, 유치원 종일반 운영 지원비가 그나마 또 전액 삭감됐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유치원 반나절도 아니고 종일반을 하고 있는 곳의 지원을 삭감한다, 이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20억 원 정도 증액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종일반을 하는 유치원의 경우도 삭감이 아니고 진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 문제는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말하자면 종일반 문제는 일반적인 유치원 교육이 매우 확대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육비로 산정을 해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유치원 교사들의 그런 수당과 보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중앙인사위원회 등과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경숙 위원 사립유치원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90만 원이에요. 90만 원이면 파출부에도 해당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담임수당 11만 원 올리자는 건데 그게 뭐가 힘든 겁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아니, 그건 알고 있지만 그러나 사립이 봉급이 적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국가가 보전한다는 것은……

○이경숙 위원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파출부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이것은 정말 창피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러나 그것을 다 보조해 주기 시작하면 기존에 월급을 제대로 주던 사람들도 전부……

○이경숙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약속을 하지 말으셨어야지요, 작년에.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건 제가 없었던 자리여서…… 죄송하지만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확인해 보시고 약속한 것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우리나라 여성들의 정치적·경제적 지위가 ‘중’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남성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적 수준으로 봤을 때 여성들의 정치적·경제적 지위가 ‘상, 중, 하’ 중에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글썽요, ‘상, 중, 하’ 셋으로 딱 나눈다면 ‘중’보다는 좀 아래쪽에 있다고 봅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우리의 경제적 지위는 한 12, 13위잖아요. 그런데 여성들의 권한 척도가 75개국 중 53위입니다. 이게 상당히 창피한 일인데 그나마 이게 올해 6계단을 상승해서 53위입니다.

그러면 여성들이 학력 수준은 상당히 높아졌고 능력도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낮은 분석을 해 본 첫 번째 이유가, 여성들의 행정관리직 진출률이 굉장히 낮은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너무나 낮습니다. 오늘도 보면 원장님 한 분밖에 안 계시지요? 이런 것들이 여성들의 정치적·경제적 지위가 낮은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여성들이 참여하는 직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대에는 별로 안 가고, 기술직에 얼마 안 가는 것들이 그러한 이유 중의 하나인데요. 그런데 마침 작년부터 교육부에서 이런 여대생들을 위해서 4학년부터 진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진로교육과정 지원사업을 했었는데, 여기에 수강생들의 만족도도 80% 이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작년에 1억 원, 1억 원이라는 게 교육부 예산 중에서 아주 적은 예산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호응도 좋은데, 이것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8개 대학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 이런 여대생들을 위해서 좀 획기적으로 늘려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이것만 보면 적지만, 이경숙 위원님 아시는 대로 또 여러 부문이 다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것만 늘린다고 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게 병렬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여성들의 정치적·경제적 지위가 세계 75개국 중에서 53위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거지요. 그 핵심고리가 바로 여대생들을 빨리 진로지도를 해서 사회적으로 취업하게 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이 돈을 늘려 봤자 몇억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늘려

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대답이 뜻뜻미지근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말씀을 드리면, 여성들의 문제는 고용 세계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교육에서 사실 보면 대학 수준까지 남녀의 기회는 이제는 상당히……

○**이경숙 위원** 제가 질의를 할 때 우선순위부터 질의를 하거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고용 단계에서부터가 문제인데 저희들도 이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보다는 확실히 여성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고용 세계에서 여성들의 지위를 확대시키는 그런 정책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 부분은 노동부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용을 하겠고요. 교육부 차원에서는 여성들이 그런 진로에 대해서 4학년부터 고민하는데 그전부터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리고 그 예산이 얼마 되지 않아요. 너무나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한지 제가 좀 납득할 수가 없는데요, 좀 늘리시는 것으로 한번 획기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교육부에는 여성교육정책진흥과라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여기서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주 여성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오게 되는데요, 국제결혼과 노동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에 대한 교육은 있는데 이 여성들을 위한 교육들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것이 언어 차이로 인해서 굉장히 심리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도 또 해결할 수 있는, 교육개발원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이주 여성들의 한국어교육 사업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다음에 장애 유아들의 문제를 질의하겠는데요. 특수교육 대상 학부모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어디로 보고 있느냐 하면 취학 전과 유치원 시기라고 합니다. 이때가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06년도에는 2000명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었군요. 그런데 2007년도에 각 교육청에서는 한 2200명 정도만 좀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왔었는데 그것도 지금 딱 2000명으로 고정을 시켜 놨군요.

그런데 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적어도 2200명 정도의 장애 유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것도 금액이 3억 6000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기가 가장 돈이 많은…… 시기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좀 전향적인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이경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나하나를 보면 참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교육부 2007년도 전체 예산 속에서는 장애인 교육 부문이 가장 증가율이 높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은 했는데 그러나 하나하나 보면 아직도 부족하지요. 그러나 계속해서 저희들이 늘려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학령 전하고 유치원 그 시기가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시기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못 봤습니다만 저출산 고령화대책 관련 예산에 너무 엉뚱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을 아마 생방송으로 전 국민이 듣고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큰 불신을 초래하겠습니까? 너무 놀랍습니다.

어떤 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이버 가정학습 체제 구축, 고령화된 노인들 집에서 사이버…… 하는 그런 훈련인지 학교 잔디 운동장 확대도 고령화된 분들이 잔디 운동장에서 놀게 하는 그런 대책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런 하나가 예산 전체를 지금 불신케 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두렵네요. 빨리 제대로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시정하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오늘 주된 질의의 마지막 순서

로서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 서울 관악갑 출신 열린우리당 유기홍 위원입니다.

2007년도 교육 부문 총예산 규모가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001년에 21조 원이었던 것하고 비교하면 지난 5년 사이에 한 10조 원 정도가 증가했고, 특히 정부 전체 재정지출에서 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비율이 2001년에 17.9%에서 내년도에는 19.4%, 거의 20%에 육박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투자 규모도 증가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0조가 넘는 것이 처음이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렇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런데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교육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서 국가의 교육 경쟁력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공교육비 비중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율이 OECD 평균, OECD 평균이 0.7%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것보다도 2.2%나 높은 무려 4배에 달하는 2.9%이고, 사교육비 부담이 많은 미국보다도 우리가 0.8%나 비율이 높습니다.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겠지요,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공교육비 부담이 높고, 사교육비가 이렇게 높은데?

또 하나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분야의 2007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7.7% 증가해서 전체에서 8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복지 투자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사회 양극화로 인해 초래되는 교육 격차 해소에 투입되는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더 확대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평생교육 분야의 예산 지원이 5년 연속 지금 1% 수준이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 위원** 평생교육에 대한 국민 인식은 높아지고,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까지 지금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7년도 예산 3074억 원으로 과연 이 평생교육 사업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기홍 위원 물론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 비중에서 보면 사실 고등교육 예산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렇습니다.

○유기홍 위원 지금 서울대학교가 어디서는 100대 대학에 못 끼고, 또 어디서…… 영국의 더 타임즈에서 100대 대학에 끼면 좋아하고 하는 일희일비가 사실은 굉장히 좀 창피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 점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총론 삼아서 그 부분은 좀 말씀드렸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유기홍 위원 제가 시간상 이것을 자세하게 다는 말씀 못 하겠는데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드리겠는데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알고 있습니다.

○유기홍 위원 이것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수적인 측면에 집착한 나머지 지방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과연 얼마나 효율성이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는 삭감되는 것이 타당하다, 삭감이나 재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대학 구조개혁 사업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 맞겠는가 하는 점 관련해서 이 점에 대해서도 어쨌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 혹은 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혹시 덧붙일 말씀이 있으면……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깨끗한 학교 만들기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시작되었다는 정책 배경은 제가 설명을 뒤의 직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초등학교와 특히 특수학교에서 화장실 청소랄지 유리창 닦기랄지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또는 교사들이 하기가 어려운 것이어서 그 부분이……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 점은 제가 다른 대안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요. 학교에 1명씩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보다도 그것은 정말 전문적인 분들한테 용역을 주는 것이 맞지, 그런 점에서 효율성의 문제도 아울러서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것은 지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 학교에 한 사람씩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 계산을 한 학교에 한 사람씩 해서 용역 사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유기홍 위원 그래서 하여간 효율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고요.

또 한 가지 간단한 것입니다만 로스쿨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 9억 원, 이것이 사실은 법이 통과가 안 되어서 그것은 국회의 임무를 저희가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자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로스쿨 관련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조속하게 법을 빨리 좀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감사합니다.

○유기홍 위원 인문학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심각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몇 가지 지표만 좀 말씀드리면, 학부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 위원 87년에 17%에서 2005년도에 14.4%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졸업생 취업률이 2003년 70%에서 2005년 53.4%로 줄어들고, 이러니까 안 가겠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유기홍 위원 연구비 지원 현황에서도 대학에 대한 정부의 전체 지원액 중 5%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이 예산 내년에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지금 논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액수를 밝혀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현재보다는 훨씬 증액된 예산을 확보해서 중요한 인문학 활성화 위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만들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 위원 한 1000억 정도 생각하시는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대충 그런 정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유기흥 위원** 기존 교육부 예산을 삭감해서 1000억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지요? 그러자면 다른 부처하고 협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논의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렇게 지금 그런 계획으로 이것을 짜고 있습니다.

○**유기흥 위원** 저는 이번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제 정말 인문학이 붕괴해서 주저앉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위기의식에, 위기감에 부총리께서도 좀 공감하셔서 이 부분은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도록…… 저희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노력하겠습니다.

○**유기흥 위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만 지금 다산의 저작들이 아직 국역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알고 있습니다.

○**유기흥 위원** 지금 소위 비변사등록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리고 승정원일기, 특히 승정원일기는 당시 정치사·생활사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자료인데 이것이 아직도 지속 중이고, 지금 속도로 나가면 저것이 몇 십 년이 걸릴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민족문화추진위원회의 고전 국역사업 예산이 오히려 축소되었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기흥 위원** 총액을 맞추려다 보니까 매년 이것이 한 40억 정도 해서 50책씩을 번역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40책으로 예산이 줄어들었네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줄었습니다.

○**유기흥 위원** 그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정부에서 전체적인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을 일괄로 5% 줄이는 원칙이 정해졌습니다, 모든 부처에. 그래서 민주당도 그렇게 된 것인데 그러나 저희들이 그래도 5%까지 감축하는 것은 줄여 가지고 약 3% 줄이는 선에서 그래도 이것을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기흥 위원** 50책에서 40책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사실은 가뜩이나 승정원일기가 완역되려

면…… 부총리님, 인문학, 그리고 특히 역사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적극적으로 제기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최소한 원상으로 좀 살려 놓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러나 정부 전체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100% 살리기는 어렵다고 불가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흥 위원** 저는 이 10억 때문에 줄이라고 총리실에서 그런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을 만천하에 공개해서…… 그럴 필요까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이것은 제가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얘기했고, 작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적을 했던 문제입니다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외국 교과서의 오류를 바로잡거나 하는 이 중요한 사업들을 거의 다 비정규직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전부가 비정규직인 것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유기흥 위원** 거의 다요, 주로 비정규직에서 하고 있고, 제가 작년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서 소요액 11억 원을 증액했는데 인건비는 올해 2007년 예산에 반영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38명, 꼭 필요한 인원 38명에 대해서는 2007년 예산으로 반영해서 정규직화하라는 취지였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0명 반영한 수준에 그쳤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교수 2명과 연구원 10명입니다.

○**유기흥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예산 심의과정에서요, 38명을 2007년 예산에 반영해서 정규직화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작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시고, 이 부분은 지금 10명 정도 증원하는 것 가지고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마는 유아교육법이 통과되면서 사실은 유치원, 유아교육은 공교육 개념으로 편입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중장기적으로 봐서, 이미 개념적으로는 공교육 개념에 포함돼 있고, 이제 유아학교로 어떻게 발전할 건가 하는 전망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은 사립학교에 대해서 선생님들 월급과 4대 보험료까지 국가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사립유치원들까지 다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무리인데, 그러나 지금 유아교육법을 만들어서 공교육 개념으로 편입시켜 놓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지금 국공립유치원의 교사 인건비하고 사립유치원의 교사 인건비 차이가 얼마나 큰지는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알고 있습니다.

○유기홍 위원 거기서 어떻게 동일한 교육의 질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나마 상징적으로라도 교재개발비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그것을 이제 내년 예산서부터는 좀 반영하자고 해서 올해는 특교로 처리했던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유기홍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이것은 작년 예산 심의과정에서의 저희 방향 설정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이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고요.

또 하나는 유아교육법 제27조 그리고 동 시행령에 보면 유치원 종일제 운영에 대해 국가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만들 정도로 종일제 운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젊은 엄마들이 직장에 다니면서 애를 키우기 위해서는 종일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유기홍 위원 그만큼 이것은 저출산대책에서 중요한 건데, 지금 형편이 어떤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알고 있습니다.

○유기홍 위원 이 문제도 저는 좀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가져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본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지금 보육시설하고 사립유치원의 표준교육비가 차이가 나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런데 지금 기본보조금은 일률적으로 4만 2000원으로, 우선 시범 운영이긴 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좀 현실화돼야 되는 점이

있는데 더 중요한 문제는…… 부총리께서 생각하시기에 아이들을 유치원 보내는 부모들하고 미술학원 보내는 부모들하고 상대적으로 볼 때 어느 쪽이 더 생활 형편이 어려운 쪽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아무래도 미술학원 쪽이 좀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러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유기홍 위원 그런데 유아미술학원 다니는 아이들은 지금 전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들이 유치원으로 전환을 하면 그들에게 보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유기홍 위원 글썄, 유치원을 할 사정이 못 되니까 미술학원을 하고 있었던 경우가 많이 있는 건데요. 아이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술학원을 대주면 그러면 태권도 학원, 무슨 학원, 무슨 학원, 무슨 학원은 어떻게 하나 하는 이것보다도요, 실제로 유치원에 보낼 형편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인성교육을 위해서 미술학원 보내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다 실제로 유아교육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애들입니다. 그쪽이 지원의 사각지대가 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말하자면 부적합한 이런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유아교육에 대한 개념이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있고, 특히 정부에서 유아교육 전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하는 것 자체가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교육부는 좀더 전향적으로 계속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정부 전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정책 개념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영유아교육 전체에 대한 개념 규정과 재구조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한번 논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 위원 하여간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부총리께서 강진에 있는 다산초당에 한번 가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다녀

온 적 있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다산 정약용 선생이 거기서 한 12년 계셨는데,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책을 한 몇 권쯤 쓰셨다 생각 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수십 권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한자가 생긴 이래로 한 사람이 쓴 가장 많은 책을 쓰신 분이 정약용 선생인데 오백수십 권을 쓰셨습니다. 목민심서를 비롯해서 경세유표 등 유명한 책들이 무척 많고 내용이 너무 뛰어나서요, 그런 것들이 빨리 번역사업이 되어서 출간되기를 바라구요.

하나 고쳐 드릴 게 있습니다.

고전번역사업비를 살리는 게 어떻겠느냐 했더니 살려 놓기가 어렵다고 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정부 전체의 예산편성 기준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아니, 그런데 예산편성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하더라도 예산을 살리고 죽이는 것까지도 거기서 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아닙니다. 그것은 국회에서 하시고, 저희는 그렇게 해서 예산안을 내놓은 겁니다.

○**委員長 權哲賢** 그렇지요? 예산을 살리기 어렵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겠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국회에서 하시는 일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委員長 權哲賢** 그러면 편성하고 살리고 죽이고 다 하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닙니다.

○**委員長 權哲賢** 위원들이 말씀하시면 10억의 돈이 살리기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어떻게 그렇게 금방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전체 측면에서 어떤 부분을 좀 삭감해서 어떤 부분을 살려낼 수 있을지 며칠 사이에 깊이 고민하셔 가지고 밤을 새우더라도 올바른 예산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이제 주된 질의가 다 끝나고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1인당 답변 질의를 합해서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곱 분밖에 신청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사업과 평생학습도시사업이 교육안전망 구축사업으로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국정감사 때도 이 두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집을 내면서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예산 등에 대해서 정책제안을 했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 당시 여러 가지 제안 중의 하나가 이 두 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시행되기보다는 앞으로 일반회계로 포함돼야 된다,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일반회계로 포함되지 않고 특별교부금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정부 전체와 이 예산안을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반예산으로 하는 데 저희들이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경숙 위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사업, 평생학습도시사업은 참여정부의 브랜드가 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요? 중요한 사업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돼야 되지요? 그러면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방과후학교는 일반회계로 이번에 됐는데 왜 이것은 일반회계로 안 되어 있는지, 교육부가 교육안전망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언제라도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끊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열심히 설득을 했지만 기획예산 담당하는 부서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더 열심히 그들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일반회계로 편입돼서 우리의 교육 격차가 해소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다음에 국립대학의 실험·실습 기자재가 확충되지 않고 오히려 그 사업비가 삭감이 됐어요. 교육부가 2003년 2월에 계획 세울 때는 2007년에 연 1500억, 2008년에는 2000억 원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실제 2007년에는 26.4%가 감축이 됐는데 왜 이렇습니까? 우리나라 이공계 대학이 상당히 경쟁력이 강화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사업비가 삭감됐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것이 항목 편성 등에 있어서 차이가 난 것으로 봅니다. 이공계에 대한 비용이 재정적으로 줄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른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철현 위원장, 유기홍 간사와 사회교대)

○이경숙 위원 아니, 작년도에 비해서 4분의 1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학별로 실험·실습 기자재를 100% 다 보유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게 다 안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삭감됐습니까? 삭감되면 그 삭감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기자재를 100% 확보해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공대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다음에 이공계 대학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리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의미로서 실험·실습 기자재 사업에 실질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올해 갑자기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26.4%가.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다른 여러 항목으로 분산이 돼서 그런데, 예를 들면 누리사업, BK21사업, 그 밖에도 최근에 대학재정 지원사업이 여러 개로 분산이 되면서 그런 기자재 사업이 다른 부문에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하고……

○이경숙 위원 누리사업에는 그 사업과 관련된 것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학생들의 실험·실습을 위한 기자재잖아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렇기 때문에 누리사업, BK사업 등에도 그런 기자재 구입비, 사용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기자재 차액의 절대액이 줄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 있는 것

인지, 실험·실습용인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일.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 부분을 재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인문학 진흥 재원이 필요한 것하고 전남대 치대의 임상교육관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위원장대리 유기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헌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학술연구지표 개발, KCI 관련해서 지금 교육부 및 학술진흥재단에서 KCI 구축을 위해서 예산 편성하고 계시지요, 이번에? 5억인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정문헌 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학문 연구자들의 윤리 연구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아시겠지만 모 대학의 BK21예비사업단장을 역임하기도 한 B 교수가 자기 자신이 지도를 한 대학원생 J 씨와 함께 2004년 8월, 2005년 1월에 ‘어플라이드 피직스 레터스(APL)’와 ‘저널 오브 멀티리얼 리서치(JMR)’라는 굉장히 유명한 학술지에 똑같은 논문을 게재했고 이후 같은 데이터와 분석법을 쓴 재탕 논문이 여덟 번이나 각기 다른 학술지에 발표돼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알고 있습니다.

○정문헌 위원 그러도 또 한편 이것에 대해서 국내외에 있는 우리나라의 신진 연구자들 가운데 일부는 언어만 달리하고 사실상의 논문 중복 게재를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이를 장려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드는 사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저희 의원실에서 조사를 좀 해 봤는데요, 일부 이렇지만 연구자들이 국문으로 쓴 논문 영문으로 번역하고, 영문으로 쓴 논문 국문으로 번역하고, 사실상 중복 게재를 내는 것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동안 영문으로 국제 저널에 내는 것과 또 국내 학계에서 발표하는 것이 말하자면 서로 분리가 돼 있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문으로 한 것을 국내에서 잘 읽지 않으니깐 또 한 편으로 해서 내고 하다 보니까……

○**정문헌 위원** 이것은 학자적 양심에 안 되는 거지요?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멀고 학자적 양심에도 안 되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앞으로는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정문헌 위원** 지금 이게 50개국 언어로 번역이 되면 논문 50편을 썼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안 되는 것인데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가 KCI 구축에 선행되어 필수적으로 연구자들이 연구윤리에 관해서 혼돈을 불식시킬 수 있는 어떤 강력한 권고안이 교육부랑 학진 차원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안 나오고 KCI만 진행이 될 경우에는 또 따로따로 놀면서 논문 중복게재 문제 나오고 제2의 황우석, 제3의 황우석 계속 양산될 수 있거든요.

이게 언뜻 보면 예산 문제랑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연구윤리 관리 확립되는 부분이 진행이 안 된다면 되려 KCI 구축예산 일부 삭감해서 연구윤리 확립하는 방향으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짚어 주시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동안 관례처럼 되어온 것이어서…… 좌우간 그 문제를 학진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헌 위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오늘 지적드렸고 이 문제로 인해서 일부 사람들이 범법자가 된다는지 문제가 된다면 교육부 책임입니까, 연구자 책임입니까? 지금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하여튼 강력하게 권고안을 내서 연구자들로 하여금, 지금 것은 관행상 어쩔 수…… 뭐, 이랬다 저랬다를 떠나서 학자적 양심을 잡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검토하겠습니다.

○**정문헌 위원** 그리고 국립특수교육원 청사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지난 국정감사 시에 지가 상승으로 부지 매입이 늦어지고 예산상 부담이 되므로 자꾸 청사 이전계획 실행이 불투명해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서 빨리 어떻게 다른 사업안을 만들든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특수교육원 부지매입비가 최초 88억에서 04년도에 148억으로 상승했다가 또 주택공사에서 110억 증액 요구한 데서 부지매입비만 총 258억이 예상되는데 기획예산처에서는 사업비 변경 승인을 해주지 않은 실정이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 문제가 기간을 끌면서 계속 소요 경비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정문헌 위원** 지금이라도 국립 특수교육원의 유치를 희망하고, 적당한 가격에 부지를 공급하고, 제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지자체 혹은 광역단체가 있다면 이 이전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주택공사가 계속 부지 매입을 제대로 추진 못 해서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강제 매입하기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정문헌 위원** 아, 그렇게 되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정문헌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도 투입 더 안 되고도 사업 진행……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내년 예산에 따라서 이것을 진행할 것입니다.

○**정문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10억 증액을 땅값 더 달라고 그래서 요구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는 변경 승인 안 해 주었는데 기존에 잡힌 예산만 갖고 부지 다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아닙니다.

○**정문헌 위원** 특수교육원 부지매입비가 최초에 88억을 잡아 났다가 04년도에 148억으로 상승했고, 주택공사에서 또 110억 증액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88억에서 총 258억으로 부지매입비가 올라갔는데 기획예산처에서는 사업비 변경 승인을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상해서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정문헌 위원 그러면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예산 집행되고 사업 진행되는 것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렇습니다.

○정문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기홍 정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춘 위원 위원장님 질의 전에 잠깐 보고자료 하나 지적을 하고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초·중등 교육 부문 예산에서 학교교육 내실화사업이 있습니다. 보고자료 20쪽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역사왜곡 대책 및 한국 바로 알리기, 이게 세부사업이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김영춘 위원 221억 원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혹시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왜 이게 초·중등…… 학교교육 내실화사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혹시 자료가 잘못 작성된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역사교육에 관한 것은 초·중등 교육국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기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부서가 그래서……

그런데 교육부 자료를 보니까 각목명세서를 보니까요, 이 사업 내용이 여기도 부기되어 있습니다. 마는 동북아역사재단 운영이 201억 원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한일역사공동위원회의 운영비, 일본 출장비 이런 것입니다. 이게 초·중등교육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특히나 초·중등교육 내실화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서 때문에 그렇게 편성되었다고 그러면 예산 편성하는 기준이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우선은

담당부서가 집행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분류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유기홍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알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참고로 각목명세서를 보면 프로그램 1300 한국사 연구 및 사료수집 편찬이라는 프로그램 사업명이 있어요. 프로그램 1000이 학교교육 내실화이고 프로그램 1300은 한국사 연구 및 사료수집 편찬입니다. 여기에 훨씬 적실한 프로그램 같아요.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할 게 고등교육 부문에서 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 활성화사업이 다년도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인데, 그중에서 학술 원자료, 로 데이터 DB 구축사업이 있어요. 도서관 활성화사업 특히 도서관 정보화사업의 핵심은 부총리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 DB를 얼마나 잘 갖추는가……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이게 도서관 정보화사업의 키포인트인 거지요? 핵심 관건사업인데……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이 사업 중에서 학술 원자료 DB 구축사업이 3년간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04년도에 4억 8720만 원, 05년도에 3억 4100만 원, 06년도에 3억 4100만 원으로 3년간 집행되어서 지금까지 3년간 누적 12억이 투자된 것입니다. 이게 원래 5개년 사업입니다. 5개년 사업인데, 올해 2007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빠져 버렸어요. 누락이 돼 버렸습니다.

담당 간부들이 한꺼번에 바뀌면서 생긴 문제 같은데, 교육부가 실수를 인정하고 나머지 2년만 더 사업을 하면 완성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럼으로써 DB 구축사업의 전체 규모가, 시너지 효과가 100% 발휘되는 것인데 이렇게 중간에 하다 말아 버리면 이것을 애초에 안 하니만 못한 것이지요. 기존의 12억만 날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실무자들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것이 아마 거기에서……

○**김영춘 위원** 교육부에서도 뭔가 실수를 인정하는 것 같아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래서 07년도, 08년도 해서 6억 8000만 원만 들어가면 이 사업이 완성됩니다. 기존에 12억이 이미 투자 추진이 되었고요. 누가 챙겨서 마저 완성할 수 있도록 예산 수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 인문학 분야 연구 지원을 더 강화시키자 이런 것인데, 교육부도 애로가 많겠지요. 정부 전체 중장기 재정계획에도 맞추어서 해야 되고, 또 다른 데에서 예산을 빼 오면 형평성 시비도 생길 수 있고, 어려움이 참 많을 텐데 정부 전체 R&D 예산 중에서 일부를 교육부에서 인문학 진흥재원으로 전환시켜서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있는 노력을 다하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렇게 해서 좀 추가적인 지원 재원을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정부 중장기예산 최종 운영계획을 보니까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학술연구역량 강화사업의 경우에는 연평균 증가율이 12.4%로 정해져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면 이 한도 안에서라도 우선 증액을 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기준이라는 게 절대 기준은 또 아닌 것이거든요. 충분히 예산당국과 상의해서 시간적인 시급성 문제라든지 갑자기 긴급소요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김영춘 위원** 그러니까 재원 마련해 주시고, 정 안 되면 아까 본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대학 구조조정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예산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대액을 줄이는 게 아니라 바로 그래서 절감하는 예산을 이런 인문학 지원 예산으로 항목을 바꾸어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리고 서울대 자연대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민병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것 한 6년씩 이렇게 리모델링해 가지고서는 이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요, 제대로. 면학 분위기만 해치고 할 테니까 이것 좀 재고를 해서…… 서울대 자체 조정을 한 결과이기는 합니다마는, 서울대로서도 또 그런 애로가 있었겠지요. 신규사업을 안 버린다든지, 최소화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원칙 때문에 그랬을 텐데 이것은 제가 자세하게 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 질의할 테니까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기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순영 위원** 아까 하던 보충질의 계속하겠습니다.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즉 야학 지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얼마 전 청소년위원회는 2006년 비정규학교 운영지침에서 2007년부터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과 비정규학교의 문예행사도 지원 중단하기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최순영 위원** 그 이유는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비정규학교에 청소년 등록 인원이 매우 적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최순영 위원** 그러나 사실 비정규학교는 학교교육에서 소외받은 저소득층 주부, 노인, 중도 탈락자, 그다음에 요즘에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등을 위한 자생적인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의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시민교육, 문해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장관께서도 관심 있는 분야라서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교육정책은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평생교육, 특히 소외계층의 교육까지 포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최순영 위원** 따라서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에 대한 지원을 교육부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교육부 차원에서 야학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청소년위원회 지원액이 한 6억 정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최소한 7억 정도는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야학에 대해서는 청소년위원회가 말하자면 거기는 청소년만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서 성인 학습자들이 제외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로서는 야학을 다녀야 되는 사람은 교육적으로 가장 소외집단이기 때문에 성인이라도 당연히 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금년에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을 우선 설정해서 16억 원을 이미 지출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성인 대상의 이러한 야학 교육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다음에 한국학중앙연구원 비정규직 연구원을 정규직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유기홍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에 교육위원회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소요액 11억을 증액했거든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인건비는 정부 예산에 반영하라는 취지로 사실 보류했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에 연구직과 전문행정직 38명, 11억을 올렸던 부분인데 사실 1억 4000밖에 반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교육인적자원부하고 기획예산처에서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해 약속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9억 6000만 원을 다시 반영해서 국책 연구사업의 안정성을 정말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입장은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명의 교수와 10명의 연구원을 우선 07년에 하고요. 향후 08년과 07년에 계속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정규직을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리고 2단계 BK21사업에 대해서 저는 삭감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물었습니다.

BK21사업은 그 사업의 목적이 정말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매년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의 경우 중복계재 등의 문제로 사회적 문제화되었고, 1단계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도

역시 논란이 많았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김병준 교육부장관이 그것 때문에 물러나야 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당시 때도 BK21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점점 없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라는 게 지적이 되었고, 따라서 교육부가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하여서 감사를 받겠다는 약속까지 그때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 이번에는 정말, BK21사업의 평가를 하지 않았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정을 하고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이제 이것을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BK사업이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 사업은 그동안 소홀히 되었던 학문 후속세대, 또 새로운 우수 전문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해결을 해 가면서 그러나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하여튼 시간이 갔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는 할 수 없고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최순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기홍 최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영 위원 이은영입니다.

우선 급식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 현장에 가 보니까 학교의 지역 사정에 따라서 저소득층 자녀, 즉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녀들이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무료 급식 지원비가 물론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 배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상위 계

층 학생들에 대해서도 실제로 지원이 없이는 그 학생들이 급식비를 부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이은영 위원 학교에 따라서는 조식 지원까지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아직 조식 지원까지 완전히 예산으로 확보하기는 어려운 사정이라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학교 청소 및 위생 관련 예산에, 지금 새로 짠 예산안에 보면 청소용역 부분을 상당 부분 집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이미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들의 경우에 노후된 시설을 조금 더 청결하게 유지함으로써 시설 활용에 있어서 좀더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고요. 또 요즘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서도 외부 용역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취직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이은영 위원 그다음에 주5일제 수업에 따라서 지금 수업이 없는 토요일, 또 평일의 경우에도 방과 후에 부모가 없는, 또는 부모가 맞벌이 부부로서 아직 귀가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래서 교사들은 주5일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학부모들이 맞벌이로 토요일에도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주5일제만 하기가 어려워져 지금은 한 달에 두 차례 토요일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오지 않는 그날도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보살피고 같이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유기홍 간사, 권철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은영 위원 그러니까 학교 단위로 수업 없는 토요일 프로그램을 바로 만들게 되면 다시 토요일 수업제가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단위라든가 또는 사이버 강좌라든가 등등의 종전의 수업 형태와는 다른 형태로 수업 없는 토요일에 아이들 관리랄까 아이들 보살핌을 조금 더 강화하는 예산을 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방과 후학교 운영을 확대해서 토요일에 그렇게 활용하

는 것을 확대시키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그리고 현장에 가 보니까 서울에서도 제가 많이 가 보는 용산 지역 같은 경우에 학교 건물이 100년 이상 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 교사를 신축하는 문제는 지금 예산에는 크게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한 5년 계획을 세워서 노후 교사들을 재건축하는 방안을 조금 더 진지하게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BTL사업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일반 다른 정부 청사나 또는 다른 기관과 비교해서 교사의 낙후 정도는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래된 학교 건물을 개선하는 예산을 특별히 배려하시기 바라구요.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 중에 강원사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낙후되어서 교무실도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도 좀 예산 배려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오색그린야드호텔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방침이 안 서 있어서 내년도 복구비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오색그린야드호텔은 순전히 영리사업이 아니라 사립학교교직원의 후생복지 증진 차원에서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것을 폐기하고 또는 매각하고 다른 시설을 구입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들고 지금으로서는 엄두 내기 어려운 이상 이것을 조금 더 경제적으로 운영하고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이 부분에 복구 예산을 넣어서 완전히 폐허로 방치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공단에서 그 문제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은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어떤 시기에 법이 개정된다든가 또 그렇게 해서 교육정책을 변경할 경우 기존의 법적 권리가 침해되어서 억울한 사람이 최소한도로 없도록 경과조치를 둔다든가 또 최대한의 구제방법을 강구한다든가 이것이 정부로서의 역할이라고 보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무관심하고 또 외면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억울함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이 한으로 박혀 있지요? 그렇게 되겠지요,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김영숙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는 꼼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최대한의 배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정책에 대해서 먼저 하고 예산 짤겠습니다.

지난 국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국 교육대학 특별편입생 800여 명이 그야말로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국정감사 때도 보니까 교육청에 와서, 모두가 그때마다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법이 어느 날 갑자기 개정이 되어 가지고 경과조치 없이 국가가 책임져야 될 것을 지금은 이렇게 외면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부총리 면담 요구를 했는데도 이것은 또 거절당했어요.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왜 면담을 해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었든가 억울해 하고 있는데…… 우선 임용이라는 것을 알고서 사범대학을 들어갔는데, 사범대학입니다, 중등교사 출신. 들어갔는데 이게 임용이 안 되었거든요. 그러면 부총리 새로 취임하셨고 그러면 어떤 건가 그것을 일단 들어 봐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은 한꺼번에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김영숙 위원 2005년도 5월 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확보된 중등 별도정원을 했습니다. 미발추, 군미추 구제하기 위해서 1000명을 했어요. 그래서 별도 제정법에 의해서 전원 구제가 된 것은 군미추 500여 명, 그 경우에는 제한경쟁, 자격검증 과정만으로 2~3개월 연수만 거쳐서 교단에 섰어요, 맞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김영숙 위원 그렇지만 교대 특별편입생들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들, 매일 와서 투쟁하는 분들인데요. 2년간 자비를 들어서 교육대학에서 초등교육 과정을 이수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때 놓여준 초등교원이 부족하니까

거기 확충하겠다고 ‘초등학교 교원으로 가겠느냐?’, ‘가겠습니다’, ‘그러면 교대 특별편입을 해라’ 그래서 2년간을 다니고 등록금도 다 냈어요, 2~3개월 연수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초등에 가겠습니다’ 한 겁니다. 거기에 진력하는데 중간에 또 바뀌어져 가지고 ‘너희들 그것 포기하고서 다시 중등시험 바라’, 거기 돈을 내고서 초등교사가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 놔두고 다시 여기 와서 시험을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 임용절차로 구제하지 않는다면 이들을 해결할 길이 없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교육부의 행정업무 미숙으로 봅니다. 담당자가 그때 꼼꼼하게 따져서 경과조치를 뒤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교대 특별편입생들의 이러한 억울하고 행정 미숙으로 일어난 이것은 반드시 구제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초등교원임용 특별전형을 확보를 해서 지난해에 1000여 명 하듯이 그런 절차로 해 가지고 이게 전국에 다 하면 예를 들어서 800명을 둔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어떤 방법 이든 간에 그것은 세심하게 다시 배려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말씀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김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들이 국립사대를 졸업했고, 그 무렵에는 우선임용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위헌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김영숙 위원 장관님, 시간 관계로……

그래서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어떤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제 의견 가지고 어떻게 하겠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두 번째는, 지금 수능이 끝났지 않습니까? 아까 김교홍 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능이 끝나고 나니까 논술 때문에 1인당 200만원이라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해서 수강생을 막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또 민원들이 많이 있어

요. 그때 “학원들에 대해서 단속하겠습니다” 해서 경기도에서 결과가 왔습니다. ‘학원 팔백몇 개를 단속을 했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901개를 적발했다고 왔습니다, 저한테 제출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광고도 보면 역시 이게 전부 다 비인가 학원인데 이렇게 전부 다 논술학원, 무슨 학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불법한 것에 대해서 제도 개선 강구합니다’ 하는데 지금 실제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총리께서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피해가 없도록……

2월 말에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전까지 다시 만든 다음에…… 이게 인가를 못 받고, 또 지금 비인가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깐 이것을 철저히 단속해서, 만일 수련원·연수원의 허가를 받고서 지금 식당 따로 계약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불법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학부모는 모르지요, 이게 선전을 하니깐. 대단해요, 여기 다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짚어 봐 주시기를 바라구요.

제가 예산 부문에서 유치원을 아까도 여러 가지 많이 짚었습니다.

지금 국립 병설유치원, 거기에 예산을 원장 경우 10만 원, 원감 경우에 5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것 맞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김영숙 위원 그것이 잘 반영이 되어서 책정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의 담임수당 없어지지 않도록 살아남은 것, 그다음에 유치원의 종일반 교사 참 애씁니다. 7시, 8시까지 있습니다. 수당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깨끗한 학교 만들기, 학교에 화장실이라든가 청소할 사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선심성 그게 아니고 꾸준히 지속할 수 있도록 저는 이것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김영숙 위원 저는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살려야 된다고 보고요.

대학강사 보면…… 제가 2004, 2005년에 짚었습니다. 국공립의 대학강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데 사립에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그것 보니

까 최대한의 시간 가진 사람이 100만 원 이하예요. 현실화되는 것을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장학 지도를 한다든가 대책이 어느 정도 안내가 돼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이것도 실태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 나머지는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인가 학원 중에 제일 문제가 되고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이 기숙학원입니다, 부총리.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委員長 權哲賢 기숙학원들이 수능시험 끝나고 나면 등록되지 않은 학원들이, 학원도 아니지요, 학생 모집을 하는데 심지어 모텔에서 공부도 시키고, 무슨 연수원 시설도 빌려 가지고 급식도 엉망으로 하고 자칫 잘못하면 화재 예방도 하지 않아 가지고 큰 위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것 담당 국장께서 기숙학원이 기숙할 것에 대한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무슨 조치를 했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委員長 權哲賢 어떤 조치를 했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러니까 불법 학원이 아닌 좌우간 그런 교수를 하는 조직이나 단체가 그런 활동을 하면 교육청이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고발이 아직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교육청이 다 알고 있는 것인데도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교육청에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그런 불법 기관은 반드시 적발해서 고발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담당 국장께서 이런 미등록된 기숙학원의 행위들에 대해서 각 교육청에다가 규제를 단속하는 조치를 취했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평생학습국장 김정기 평생학습 국장입니다.

2주 전에, 수능 전에 수도권 지역에 있는 그런 사태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예상을 하고 16개 시·도 담당자 회의를 해서 그 부분 집중적으로 단속하라고 했고요. 또 앞으로 개정된 학원법에 의해서 시행령도 저희들이 빨리 만들어서, 기숙학원 자체를 제한하는 그런 시행령을 지금 저희

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2주 전에 16개 교육청 관계자들을 불러 놓고 회의를 하고 조치를 취했네요?

○**교육인적자원부평생학습국장 김정기** 예, 그렇게 했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그러면 그 결과가, 각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실태를 어떻게 조사했는지, 단속했는지 그것까지 놓치지 말고 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평생학습국장 김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일은 잘하셨는데 결과 마무리를 잘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평생학습국장 김정기** 예.

○**委員長 權哲賢** 다음은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겠습니까.

○**유기홍 위원**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요, 시작하겠습니다.

깨끗한 학교 만들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알아보았는데 한 학교 1명꼴로 하되 용역으로 하는 건데 아직 아이디어 수준인 것 같습니다. 10개 학교를 하나씩 묶어서 열흘에 한 번꼴 정도 청소가 돌아가도록 한다는 이야기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아직 아이디어 단계에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시·도 교육청이 반액이 되는 한 이백몇십억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친일인명사전 편찬 작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지 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자세하게는 몰라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것은 소위 말해서 민간이 주도해서 학자들과 NGO 그리고 보훈단체 이런 쪽에서 중심이 되어서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고, 중간에 한 번 국회가 예산 삭감을 하자 대중운동이 일어나서 국회에서 주기로 했던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이 인터넷을 통해서 모금됐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2010년이 경술국치 100년이 되는 해인데, 지금 민족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경술국치 100주년 기획사업 해서 '일제 침략 수탈사' 이것을 편찬하는 작업이 기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민간 차원의 노력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 큰돈 드는 일은 아닌데, 민관이 좀 협력한다는 차원에서 친일인명사전의 전례에 준해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실 생각은 어떠신가 여쭙 보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수탈사 지금 그 말씀은 처음 듣는 내용이어서 제가 현재는 딱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러나 중요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한번 실무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주대학교 교수연구실,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사진까지 해서 잘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초·중등교육에 많은 예산을 쓰고 더더군다나 방과후학교라든지 이런 교육 양극화 사업, 특히 의무교육 기관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학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데 그에 비해서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한 실상을 제주대학교에서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혹시 서울대학교 대학원 연구동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제가 알기로는 단과대학별로 다 대학원생들 연구실이 있고……

○**유기홍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짓다가 중단되어 있는 사정을 알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서울대학교가 하도 많은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 위원** 이 부분은 한번 좀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느 정도나 하면 짓다가 예산이 반영 안 되어서 지금 골조가 녹이 슬어 가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이것은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해야 될 사업인데 예산지원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아시겠지만 짓다가 골조가 녹이 슬면 나중에 그 건물의 안전성이나 이런 데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예산 낭비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챙겨 봐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한번 실태를 파악하겠습니다.

○**유기흥 위원** 잠깐 남았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 한 2년간 자카르타, 호치민시, 그리고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학교, 중국에 있는 학교, 여러 군데를 좀 다녀 보았습니다만, 나라마다 형편이 다 다르고 그렇긴 한데, 전반적으로 해외동포 아이들에 대한 교육,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국가가 제대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하고는 있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유기흥 위원** 많이 부족하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유기흥 위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일본 경우 보면, 거기에 우리 학교가 있습니다만 더 많은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오사카에 가면 이쿠노라는 우리 동포들 밀집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학교들은 70%가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가 없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조총련계 학교들은 지금도 상당히 많이 민족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렇습니다.

○**유기흥 위원** 그런데 민단체 학생들 같은 경우 학교가 워낙 적기 때문에 70%가 우리 아이들인데 일본어로 교육을 받고, 국어라는 이름으로 일본어를 배우고, 국사라는 이름으로 일본사를 배우고 있는데, 단지 거기에 특별활동 시간을 1주일에 한두 시간 얻어서 우리 민족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나마 오사카시 교육위원회가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활동 시간에 우리말을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 액수가 너무 적어요.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챙기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해외동포 아이들에 대한 교육 예산을 지금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늘리는 데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마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늘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다 편성이 되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이 용기 있게 끼어들 틈이 없는 것이 정부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부총리께서 새로 오셨고, 사태를 잘 파악하셔서 시대에 적절한 예산 반영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인문학 분야에 관한 예산입니다만 교육부 자체 내에서의 예산은 자연과학이 한 1800억, 인문과학이 약 1300억 해서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자연과학은 다른 여러 분야로부터, 다른 부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많은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문학은 여기가 아니면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더구나 인문학의 위기라지만 저는 인문학의 새로운 도전, 새로운 기회라고 봅니다. 지식·정보·문화 시대에 디지털 영화라든지 영상 콘텐츠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이 지금 막 피어나 가지고 해리포터 영화 하나가 현대자동차 몇백만 대보다 더 돈을 버는 이런 시대가 왔을 때에, 이때 그 콘텐츠들이 개발되지 않으면 한국은 세계로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런 콘텐츠들 개발시키는 핵심이 인문학이 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문학의 새로운 기회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가 바로 그런 데서 창출되기 때문에 이때에 그런 분야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없이는 안 되겠다, 이런 점을 부총리는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한 과감한 지원, 또 유아교육에 대해서 지금 이 아이들에게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그런 속에서 과감한 투자를 하고 줄일 것은 확실하게 줄여 주는 그런 예산심의가 이번에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간곡하게 또한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관행에 너무 젓지 마시고 새로운 것을 좀 개척할 수 있는 정신으로 예산심의에 임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 제 말씀의 진의를 잘 아시겠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이상으로 모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님, 이주호 위원님, 최재성 위원님, 정봉주 위원님, 임해규 위원님, 이군현 위원님, 김교홍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정문헌 위원님, 김영춘 위원

님, 최순영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 또는 서면답변 요구가 있었습니다. 유기홍 위원님도 서면답변 요구가 있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예산 심의 기간 늦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관계로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를 부득이 2년 전에 했던 방식대로 부문별로 나누어서 실시한 후 전체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된 각 부문별 위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1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4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권철현	김교홍	김영숙	김영춘
민병두	안민석	이경숙	유기홍
이군현	이은영	이주호	임해규
정문헌	정봉주	최순영	최재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노재석
전문위원	구기성

○정부측 참석자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차관	이종서
차관보	김광조
정책홍보관리실장	박경재
학교정책실장	황남택
학교정책국장	김홍섭
지방교육지원국장	우형식
인적자원정책국장	김경희
평생학습국장	김정기

대학지원국장	황인철
국제교육정보화국장	이병현
감사관	김은섭
기획홍보관리관	엄상현
재정기획관	변창률
대학혁신추진단장	곽창신
학교정책현안추진단장	심은석
울산국립대학 건설추진단장	황지현
정책보좌관	강대중
비서실장	김응권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총무과장	심상수
국사편찬위원장	유영렬
국제교육진흥원장	나종화
국립특수교육원장	이효자
교원소청심사위원장	유선규
교육인적자원연수원장	임승빈

○기타 참석자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덕홍
한국학술진흥재단사무총장	민동필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학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관리공단이사장	서범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이삼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김영식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이기호

【보고사항】

○의안 회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 발의)

(2006. 11. 6 김재윤·강창일·강혜숙·김동철·김대년·김희선·민병두·박재완·안민석·안상수·이광재·이계경·이계진·이미경·이인기·이영호·이해봉·지병문·제종길·정청래·황우여 의원 발의)

11월 7일 회부됨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해규 의원 대표발의)

(2006. 11. 9 임해규·이주호·정문헌·김성조·김충환·이재웅·김양수·김정권·서상기·차명진 의원 발의)

11월 13일 회부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 의원 대표 발의)

(2006. 11. 10 이군현 · 이해봉 · 김명주 · 김학
송 · 박세환 · 이인기 · 정성호 · 정갑윤 · 서재
관 · 안상수 의원 발의)

11월 14일 회부됨

교육복지법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006. 11. 10 이인영 · 김근태 · 김동철 · 김영
춘 · 김우남 · 김태홍 · 문학진 · 민병두 · 백원
우 · 우원식 · 유기홍 · 유선호 · 안민석 · 이경
숙 · 이낙연 · 이목희 · 이은영 · 장영달 · 정장
선 · 최순영 · 최재성 · 최철국 의원 발의)

**私立學校法 일부개정법률안(최순영 의원 대표
발의)**

(2006. 11. 13 최순영 · 권영길 · 노회찬 · 단병
호 · 심상정 · 이영순 · 임종인 · 천영세 · 현애
자 · 강기갑 의원 발의)

**高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최순영 의원 대표
발의)**

(2006. 11. 13 최순영 · 권영길 · 노회찬 · 단병
호 · 심상정 · 이영순 · 임종인 · 천영세 · 현애
자 · 강기갑 의원 발의)

高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 11. 13 정부 제출)

이상 4건 11월 15일 회부됨

**2006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운용계획 변
경안**

(2006. 11. 15 정부 제출)

11월 1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